

제416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17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3)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5)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6)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7)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9.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12. 업무보고
 - 가. 국토분야 소관기관(13개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주택관리공단(주)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건설기술교육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나. 교통분야 소관기관(15개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주식회사에스알
- 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유통(주)
- 코레일테크(주)
- 항공안전기술원
- 국립항공박물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4
 - o 소위원장(권영진·문진석·한준호·엄태영) 인사 4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6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3) 6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5) 6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6) 6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7) 6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5) 6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6
9.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6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6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	6
12. 업무보고	12
가. 국토분야 소관기관(13개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주택관리공단(주)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건설기술교육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나. 교통분야 소관기관(15개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주식회사에스알	
- 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유통(주)	
- 코레일테크(주)	
- 항공안전기술원	
- 국립항공박물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1시11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 건과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국외 출장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토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교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 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영진 위원님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진석 위원님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준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태영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에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4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권영진·문진석·한준호·임태영) 인사

(11시13분)

○위원장 맹성규 네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택 토지 건설 등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과 관련 민생과제 해결,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통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문진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교통소위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런 소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소위 위원님들께서 주신 법안도 우선 심사하는 데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모시고 이 중책을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맡겨 주신 데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경기도 고양시를 출신 한준호입니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국가 예산과 결산을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사정상 기관장님들께 업무와 관련된 현안을 충분히 질의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전체회의에서 제가 한국도로공사 조찬간담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 해명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올해 예산에 서울-양평 기본·실시설계 62억 원이 반영돼 있어서 ‘미정’으로 표기하고 넣었다 이런 건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한다면 이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2년 차도 용역 예산 기본·실시설계 예산이 사실상 집행되지 못할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예산결산소위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심사해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청원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21대에 이어서 22대에도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21대 후반기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하여튼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22대에서는 국민적 청원을 많이 받아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같이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청원심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법률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의 심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1시18분)

○위원장 맹성규 먼저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3건의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3)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25)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6)
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7)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5)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7)
9.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 의원·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4)
1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04)
1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57)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총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은 지난 회의에서 대체토론까지 마쳐 오늘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지난 회의 이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기왕 의원, 윤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 이연희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로 직접 회부하여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안의 소위 회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의 대체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친 후 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서 소위원회 심사 절차가 의무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위원회에서 의결 없이 대체토론 이후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대체토론 이후 바로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의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충북 청주 흥덕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안은 일몰기한 도래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여 유효기간 없이 운영되도록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의 저운임에 따른 화물차주의 과로·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양질의 화물운송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도로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었고 현재는 일몰기간이 경과하여 제도가 실효된 상태입니다. 이에 동 개정안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존 안전운임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가지번호를 활용하여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안전운임제도를 재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개정안 발의에 앞서 한국물류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등 화물차주와 한국통합물류협회 그리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유가·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화물업계 모두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화물운송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안전운임제 재도입이 절실합니다.

모쪼록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잘 살피시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7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진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절차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주자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대기자통합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주 희망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효율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2023년에 이미 개정·시행된 토지수용 관련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관한 허가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신속성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맹성규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의료·교육·문화·체육·복지·관광 등 관련 시설이 집적된 은퇴자마을(도시)의 조성, 공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에 대한 주거복지와 돌봄·의료 체계가 미비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은퇴자와 노인들이 수요에 맞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는 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법 규정대로 오는 8월 20일부터 주 40시간 의무화 규정을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방안과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몰기한이 이미 도과하여 실효된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이를 항시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의 안전운임제가 화물차주의 근로시간·근로소득 및 교통안전에 미친 효과와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 요구는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균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균 위원 윤종균입니다.

코레일에 자료 요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철도공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코레일이 휠체어 좌석을 예약한 장애인 승객의 탑승을 입석 손님이 가득 차 탑승이 어렵다며 탑승을 거부해 국민의 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좌석을 예약을 하고 3분 전에 도착해서 교통약자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입석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약한 장애인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교통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있는지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재차 점검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에 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휠체어 서비스 등 승하차 도우미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187건에 달하고 해마다, 교통약자 배려 서비스 관련 불만 접수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22건이었고 올해는 아직 반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25건에 이릅니다. 그래서 각 연도별로 접수된 불만 사례를 모두 원본 그대로 제출해 주시고.

곧 있으면 휴가철입니다. 휴가철과 명절 연휴 등 철도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는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그 대책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코레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통약자 맞춤형 내비게이션을 2023년 12월까지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발 현황과 내비게이션 제작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구했거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과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공사 내 내규와 지침 등 제규정을 모두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법률안 관련해서 자료 요구이기 때문에 아마 철도공사 코레일 사장께서 지금 밖에 계신 것 같은데, 본부장 나와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기획조정본부장 이민철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말씀드린 자료 다 들으셨지요?

○한국철도공사기획조정본부장 이민철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코레일 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철도역사 누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813건이었습니다. 2021년에 292건, 2022년에 221건 그리고 작년에 300건 누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누수 피해 중 228개소에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지만 72개소는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도 철도역사 누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고요. 우선 올해 발생한 철도역사별 누수 피해와 이전 피해에 대한 조치 사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극한호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단정짓지 말고, 사람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몇 년간 발생했던 사회적 참사들을 보면 아마 작은 것들이 큰 참사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건의 사회적 참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 절대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코레일 사장님, 관심을 갖고 꼭 개선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자료제출 요구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 동작구에 있는 푸른주택종합건설 시공 관련된 32개의 주택이 지금 연쇄적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돼 있고 3개가 확인됐고 2개는 진행 중이고 그 나머지는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달라는 저의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조치 사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회의를 위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내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해 달라고 한번 질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국토부차관님.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위원장 맹성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 업무이긴 한데 국토부가 지금 전세사기 피해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있고, 지금 복기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현황은 알고 있어야 그다음에 뭐를 할지가, 다음을 위한 조치 사항이 준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작구하고 협의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빨리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오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 하세요.

○윤종오 위원 철도안전정책관님 나와 계세요?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예.

○윤종오 위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서 신규·개량 노선이 건설되는데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30년 개통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서-광주 노선과 관련해서 사업 선정과 차량 도입 계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전용기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곧 나가셔야 되니까, 지난번에 국토부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기려고 말씀드립니다.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를 탈 때 일반인의 6배 운임료를 내야만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을 자료로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자료 요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2차관님, 2차관실에서 준비하셔서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11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5분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국토부차관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은 한 12시 반경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업무보고

가. 국토분야 소관기관(13개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부동산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국토정보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주택관리공단(주)
- 새만금개발공사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건설기술교육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나. 교통분야 소관기관(15개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철도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공항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국가철도공단
- (주)에스알
- 코레일관광개발(주)
- 코레일로지스(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 코레일유통(주)
- 코레일테크(주)
- 항공안전기술원
- 국립항공박물관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11시37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토 분야 13개 공공기관과 교통 분야 15개 공공기관 등 총 28개 공공기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공공기관들은 주거 교통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장들께서는 각 기관에 주어진 책무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인식하시어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직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기관장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정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성요 기획조정실장,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이우제 도로국장,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 그리고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밖의 22개 기관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2대 국회에서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및 임대주택의 건설,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각종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이루어 왔습니다. 아울러 전국에 택지와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고물가로 민간과 공공 모두 지난해 주택 착공 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미분양주택 누적과 몇몇 PF 사업장 부실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대기업까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공사에서는 올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과 빠른 투자 집행에 매진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임을 감안하여 세부 업무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며 양해해 주신다면 네 가지 중점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 착공 감소에 따른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착공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주택의 적기 공급 여부가 시장 상황을 좌우함을 감안하여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금년 착공된 물량은 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택 승인과 착공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용지 중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도 직접 착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더 이상 주택 품질을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단계의 품질관리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저감, 장수명 설계를 기본으로 전 공정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겠습니다.

도심 내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매우 중요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 등의 여파로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면서 전월세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입주하실 수 있도록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3만 7000호 공급하겠습니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부터 매입약정, 착공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약 200명의 우수인력을 전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일정을 6개월 이상 단축시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장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셋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사는 그간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고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 6월까지 총 685건의 주거대책을 시행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면 공사는 피해보상을 충실히 이행하여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투자 활성화를 견인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사는 올해 총 18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고 상반기 10조 3000억을 집행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사의 토지 매입도 지속 추진하여 PF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반도체 속도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고 13곳의 지방권 국가산단 역시 지역특화형 첨단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과 충청 등지에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사에서는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긴급 주거지원에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차질 없는 투자 집행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각종 제도개선, 규제 완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국민의 뜻으로 깊이 새겨듣고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2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1993년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시작하여 2015년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새롭게 출발하였고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하고 전세보증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적 운용 등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기금 전담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거안정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보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보증제도를 정비하고 CS 역량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급 기반 금융을 확대하겠습니다.

안정적 주택공급 견인을 위해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 도심 정비에 대한 신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ESG 경영을 선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협력사업 추진 등 ESG 경영을 확산함과 동시에 내부통제 총괄시스템을 확립하고 대외 소통도 강화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채무건전성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거정책, 주택금융에 대한 정책연구를 확대하여 지속가능경영과 주택도시금융 선도를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10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요청하신 전세보증 악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공사는 전세보증 악용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근절을 위해서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담보인정비율 하향 등 전세보증 발급 대상 주택의 요건을 강화하였고 감정평가기관 추천제, 감정평가 가격 적용순위 변경 등 감정평가 활용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시세정보와 위험성 진단,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여 전세사기 예방과 보증 악용 소지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는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전세보증 악용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방향과 전세보증 악용 방지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저와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며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업무보고는 별도로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공사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 공사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졸음운전과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2차 사고 행동요령인 비트박스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고속도로에 대한 대규모 보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막힘없는 고속도로로 경제 활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4조 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안성-구리 등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교량 점검 등 유지관리에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봇서비스, 드론·UAM 시설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휴게소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비스 혁신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K-MaaS 시험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휴게소 음식을 명품·실속 투트랙으로 운영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대안제시형 낙찰제 도입을 통해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우수 기술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휴가 기간 동안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갓길차로 추가 운영 등 도로용량을 확대하고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을 통해 정체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대한민국 철도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KTX 20주년, 광역철도 50주년, 대한민국 철도가 130주년을 맞습니다. 뜻깊은 해를 맞아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중점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철도 전반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선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정비하고 유지보수 작업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KTX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GTX-B·C 운영에 참여하여 운송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에 직접 참여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철도 자산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영업 흑자와 2026년 부채비율 100% 대 달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모빌리티 혁신을 하겠습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교통과 관광 등 각종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코레일형 MaaS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의 한계를 넘어 종합 모빌리티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지향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신기술과 해외 선진 철도 교육을 확대해 미래 철도를 대비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청렴과 윤리,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는 코레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뵙고 인사드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은 국민의 빠르고 안전한 철도 이용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광역철도를 포함한 국가철도망의 건설과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우선 구간 개통에 이르기까지 우리 철도는 국민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점 철도망 구축사업을 국민과 약속한 개통 시기에 적기

개통하여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개통 예정인 서해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지방권 철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지역 간 교통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철도지하화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철도 부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 조성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산업의 새로운 미래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R&D 투자로 한국형 철도기술을 개발하고 철도시스템 전반에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여 대한민국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국가철도공단 임직원 모두는 고품질의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민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국민의 곁에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공항은 국민의 성원과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공항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악화된 실적을 회복하며 완전한 공항 운영 정상화를 이루었고 3년 만에 흑자 전환도 성공하여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9년 대비 여객은 96% 화물은 108%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세계 항공운송사업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산업 간의 융복합, 고부가가치 창출, 인프라 확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은 안전과 서비스 등 공항 본연의 기능을 확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상반기 ‘공항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공항’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담은 비전 2040을 수립하였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공항 운영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가고 싶은 공항, 그 이상의 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디지털 공항 혁신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운영 서비스 시설관리 등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오프에어포트 이지드랩

스마트패스 등을 통해 빈손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연결 모빌리티 허브를 완성하겠습니다.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전 세계 여객 물동량을 유치하고 공항 내 자율주행시스템을 적극 도입함은 물론 UAM GTX 등 전 국민의 공항 접근성을 높여 메가허브공항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고 싶은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문화예술공항을 만들고 공항 중심의 문화·관광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교통시설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전문그룹으로 도약하며 국민의 더 큰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사와 자회사의 생산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기회와 잠재력을 발굴하고 세계 1위의 물류·MRO 거점을 구축하고 신규 해외사업 수주로 K-공항산업 수출을 확대하여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모두는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공공기관장들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분야 공공기관장을 먼저 소개하고 교통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기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입니다.

다음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백성기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허종길 주택관리공단(주)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입니다.

다음은 이강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입니다.

다음은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남일석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이종국 (주)에스알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시섭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이준우 코레일로지스(주) 사장직무대행입니다.

다음은 전찬호 코레일네트웍스(주)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김영태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조대식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입니다.

다음은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 원장입니다.

다음은 안태현 국립항공박물관 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보충질의 3분, 추가질의 3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김정재 위원님, 준비 되시겠어요? 김정재 위원님까지 하시겠어요?

○**김정재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오전 중에는 김정재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돼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보통 아파트 공급이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지표가 무엇입니까? 인허가 물량인가요, 아니면 준공이나 착공 물량인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인허가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인허가 물량.

어제 ‘공급 반토막, 매매·전세 일제히 뚝’라는 일간지의 1면 기사를 보셨지요? 그때 공급의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얘기했는데 1월에서 5월까지라고 한다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줄어든 것은 맞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보통 인허가 물량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공사비 상승이나 비용 부담이 좀 클까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하고요. 실제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고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 혹은 입주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보다는 좀 늘어나나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계획으로 잡고 있는 공급계획 물량 자체는 저희들이 54만 호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는 30만 호로 잡고 있고요. 현

재 5월까지의 아직 충분한 인허가 물량 실적은 달성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5월까지 12만 6000호 정도가 인허가 물량 실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분명히 물량이 좀 확보될 수 있고 또 내년도 서울 아파트는 인허가나 입주까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기사가 나온 이후에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는 없고 ‘이게 아니다. 올 상반기에 준공과 착공이 늘어났다’라는 것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사는 대체로 맞는데 준공과 착공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알아 달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현재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매매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보면 입주 물량, 준공 물량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서울 지역의 준공 예정 물량이 금년도에는 3만 8000호 내년에 4만 8000호 해서 장기 평균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한 물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국민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까, 지금이라도 영끌을 해야 되나, 이게 지난 정부에서처럼 악몽이 되풀이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 주무부서인 국토부는 ‘아니, 기사가 틀렸고 우리가 맞다’, 그래서 맞춤형 수치만 제공할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허가가 준 게 맞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나아지고 그리고 준공도 입주도 늘어나니까 집값 걱정 안 하시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준공 착공도 어차피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못 하게 해서 막혔던 규제 완화해서 이제야 숨통 트인 거니까요.

이렇게 자료를 내야 국민도 이해하시고 걱정을 덜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공급 반토막’ 이 시켜면 헤드라인에 국토부에서 욕하고 기사랑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취지입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은혜 위원** 나중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한준 사장님,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것은 LH 아파트 주민분들이 일상적으로 식사하시고 아픈 곳 치료받는 사회복지관입니다. 그런데 30년 지나니까요 천장 벽면에 물도 새고 곰팡이 슬고 이렇게 복지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배관이 터진다는 의미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김은혜 위원** 분당의 청솔6단지 한솔7단지도 증개축이 안 돼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증개축 누구 책임입니까? LH입니까, 지자체입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게 당초에 부지는 LH가 공급을 했고 지어서 전부 지자체에 위임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LH가 무상임대했으니까 유지 관리 보수를 지자체가 하도록 협약도 맺고 하시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0년의 장기임대주택법을 보면 LH가 리모델링 같은 관리 업무를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안 되고 있는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2016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국가와 5 대 5로 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16년 이후에 보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폐지가 된 사항입니다.

○**김은혜 위원** 분당에 와서 보니까요 정치인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LH 주민분들 문제에 번거롭고 부대끼니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지금 GDP 3만 4000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민만 지자체나 LH에서 서로 예산이 없다고 떠넘기다 보니까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설 시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김규철 실장님, 저는 주민분들 목소리가 작다고 주거환경까지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복지관 예산을 국가가 반영하고 감당해 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정부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지금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볼 때는 기재부와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자체나 LH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주민만 애먼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실장님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김 의원님 지역구에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아마 의원님 지역구 전체에 다 관련되는 건데, 실상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정 당국과 협의한다 그러는데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될 데가 어느 단지인지 파악하고 계시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LH에서 그걸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어떤 내용을 어떻게 협의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전국에 사회복지관이 195개 정도 되는데 20년 이상 된 것을 선별했고 2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그간에 우리가 리모델링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한 69개소가 되고 있는데 69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사업비를 책정해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료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국토부 보고에 의하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할지 협의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위원장 맹성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게 전 지역구에 다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국회에서도 예산을 같이 협의해서 같이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위원장 맹성규 제출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입니다.

○박용갑 위원 지난 10일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에 보면 유등교 상판이 일부 내려앉았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박용갑 위원 혹시 점검하셨나요? 보고는 받으셨나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집중호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침하하고 상판이 한 20~30cm 기울어져 가지고 문제가 됐고요. 마침 통행이 통제돼서 인명 피해는 없었고, 저희 원에서는 초기 현장조사를 수행했고 또 대전시와도 계속해서 긴밀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현재 교량 출입이 통제됐지만 다시, 지금 굉장히 폭우가 심하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면 사실 다시 내려앉을 그럴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비단 유등교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사항이 있나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일단은 해당 유등교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보강 방안을 지시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을 같이 지원하는 걸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유등교가 2022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B등급을 받았었는데 보니까 보조 부재, 그러니까 주 부재 밑에 있는 보조 부재가 약간 결함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B등급을 받았는데 기능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어요. 2년 전 상태가 어느 정도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상판이 내려앉았단 말입니다. 물론 폭우가 아주 강력했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기준상으로 보면 수중침하 측정이 선택사항이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박용갑 위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측정할 수 있는 거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박용갑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점검할 때는 사실 수중침하 측정을 했었나요? 그때는 못 했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그때는 수중침하 점검은 없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유등교 문제가 하천 아래 토양이 불어나서, 토양에 물이 불어나서 쏠려 갔는데,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관리원에서 나오셨고, 가 봤는데 사실 이것을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의 안전관리체계가 너무 시설물 외관 상태 파악이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적 요인이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갑 위원 지금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박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어요.

B등급을 받은 유등교가 이 정도로 침하된다면 C등급 D등급 받은 이런 수많은 전국의 교량들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 정자교 붕괴 사고 나면서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기술자 자격 요건을 좀 강화했다든가 아니면 등록업체에 대해서 기술인력이나 장비를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강화한 면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특히 수중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시켜서 육안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걸 의무조항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좀 싫어하겠지요, 예산이 들어가니까?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종전에 점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박용갑 위원 비용이 들어가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박용갑 위원 사실 이 유등교는 대전의 큰 주도로입니다. 8차선 주도로인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대전시민들이 많은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관리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일단은 대전시에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철거나 아니면 보수나 아마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보수보다는, 이게 54년 됐습니다. 54년 됐기 때문에 새롭게 건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충남 아산갑 지역구 복기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한준 LH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근래 들어서 작년 재작년 해서 공공주택 공급이 LH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 실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면, 지난 정부의 평균 실적과 비교해서 거의 한 30% 가까이 공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우선은 인허가 물량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이 없는데……

○복기왕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실적은 인허가로 말씀하신다고 아까 국토부 간부께서 말씀하셔서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거의 한 30% 정도 실적 차이가 납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입임대주택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최근 이삼 년간 급격히 줄어듭니다. 2019년·20년 목표 대비 100%, 21년 67%, 22년 46%, 23년 23% 이렇게 줄어 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22년도에 줄어들게 된 것은 당초에 기축매입을 했었는데 기축매입 고가 논란이 사회적으로 제기돼서……

○복기왕 위원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제가 23년에 부임을 해 가지고……

○복기왕 위원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과거 원희룡 장관 시절에 일반 시장할인율보다 좀 더 높은 금액에 한 80억 정도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도덕적 해이가 있다 해서 원가 기준으로 구매하겠다고 한 이유로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대통령이나 혹은 장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정책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대한민국이 아닌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기왕 위원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23년도에는 목표 대비 23%까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후진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된 대안을 주로 LH에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냈는데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 동안 LH에서 매입 물량이 불과 7건, 보니까 5건에서 한 20일 동안 2건이 더 늘었어요. 7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실적을 갖고 있는 LH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들이 신뢰를 갖고 바라볼 수가 있겠는가라는 걱정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 현재 정부에서 이런 정도 안이 나온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만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LH를 통해서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LH 덤터기 썼다 이런 말도 하세요.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저희는 일단 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주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입니다.

○**복기왕 위원** 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사회적 중요한 관심도를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주요 해결을 LH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사장님께서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우선은 경매로 7건밖에 못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위반건축물도 있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매가 일곱뿐이 안 된 것은 경공매가 유예기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매에 나온 물건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미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매입을 못 한 사유는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복기왕 위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것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세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가가 차이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경매차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LH 감정가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경험으로 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일종의 업체나 혹은 추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신해서 해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감정가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분은 감정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분이 감정평가사 하나를 선정하고 저희가 하나 선정을 해서 합산해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는데 이번의 전세사기 피해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고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자 측에서 감정평가인을 한 기관을 선정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 선정해서 합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정 그렇지 않다면 대형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업체를 정해 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선정을 해 주셔도 저희는 그것을 받겠다, 그래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서두에 보고드린 말씀과 같이 피해자는 아무리

많이 감정가격을 책정해도 부족하게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야 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LH가 굳이 감정평가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아집은 버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정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LH에서 이 일을 수행한다 할 때 재정 투입은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 추계와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불가피해요. 얼마가 들어갈지 추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또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 부분은 현재 정부가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 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것은 전체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 LH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업무 취급함으로 인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실행기관이 될 경우에 최대한 지금 나타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그 밖의 문제점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들을 국회에도 함께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의 마지막으로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북구 김정재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전국에 해상 교량이 한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경북만 해상 교량이 지금 전무후무합니다.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일만대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 경북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다리 하나만을 건설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다리는, 지금 동해안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포항-영덕고속도로 또 포항-울산고속도로가 있는데 포항의 남북이 단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고속도로가 지금 단절이 된 상태입니다. 이 단절된 구간을 조속히 연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교는 동해안고속도로의 소위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도로망의 균형발전 그리고 또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교통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도로망이 서해안과 남해안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자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안고속도로를 완성함으로 인해서 U자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동서 균형을 맞춘 소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 측면에서도 지금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라든지 아니면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남·북구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산단을 연결하는, 그래서 물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대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가 총 사업비 협의 중인데요. 지난 5월 30일 날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차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서 지금 향후에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총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대형공사 입찰 심의도 할 거고요.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없이 지체가 되면, 올해 예산이 1350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지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공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도 좀 해 주시고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제가 현장도 좀 다녀왔고 위원님이 관심이 지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또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김정재 위원** 이게 오늘 하루, 몇 년 전 삼사 년이 아니고요 20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김정재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역들이 많은데 포항역이 요즘 아수라장입니다. 주말이면요, 저도 기차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제가 기차역 근처에 가서 택시에서 내리면 제 앞의 모든 승객들이 다 택시에서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놓칠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분명히 지금 니즈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아주 큼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말에 한번 진입하면 빠져나오는 데 한 30분씩 걸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향후에 SRT도 증편될 예정이고, 특히나 지금 현재 한 400여 면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운영을 중단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장도 더 필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도로도 다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철도공단의 담당자들께서 지난 3월에 포항역까지 직접 방문을 해 주셨고요 또 어떻게 개선을 할지에 대해서 보고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확장을 하고 또 출입구 위치도 바뀌서 차량 동선도 분리를 하고 그다음 택시 공간도 추가 확보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후면에 주차장을 반드시 추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철도공단 땅인데요 이 땅을 지금 점용허가를 할지 아니면 사용허가를 할지 어느 게 나올지 검토 중이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정해서 좀 조속히 추

진을 해 주시고, 만약에 공단이 도저히 나는 못 하겠다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이것 광명역 뒤 주차장처럼 민간 참여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말씀하신 대로 포항역 주변의 교통 환경이 심각한 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항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시와 협의하는 것 중요한데 본 위원하고도 꼭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검토는 다 된 것 같은데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 2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건설 유지보수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 우리 동네를 지나간다 했을 때 그 동네가 혜택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손명수 위원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을 때 우리 동네를 지나가요, 그 고속도로가. 그런데 우리 동네에 그게 도움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지역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규 IC라든가 하이패스 IC 이런 등등의 입출입구가 있어야겠지요.

○손명수 위원 진출입구가 있어야 되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손명수 위원 철도가 놓아졌을 때 철도역이 있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겠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렇지요.

○손명수 위원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양평IC인데요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IC입니다. 이게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IC 정책을 도입하면서 만들어진 IC인데요 그 경과를 죽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1987년도에 남양평……

다시 아까 그 지도 띄워 봐 주세요.

이 지도는 많이 보셨지요,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손명수 위원 작년에 국토위 할 때 많이 띄웠던 지도인데, 여기에 땅들이 좀 있잖아요.

1987년에 지금 영부인 일가가 분할상속을 통해서 병산리 1000-11 등 토지를 상속받습니다. 남양평IC 인근이에요.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실시설계는 2000년 9월 달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양평군에서는, 당시에는 강상면IC라고 했는데 IC 추가 설치를 당시 설계는 없었는데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장모께서 백안리 462-1을 매입하시고 처형이 2005년도에 또 매입을 하고 2005년도에 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강상면IC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 땅은 또 매입이 이루어졌고, 2006년도에도. 2007년도에 김선교 군수가 당선이 됐는데 당선되고 바로 그해에 강상면IC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또 땅 매입이 이루어졌고, 다 근처입니다. 1차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김선교 당시 군수께서는 총리께도 건의를 하시고 재선된 이후에 또 국토부 찾아가 건의하시고 2011년도에는 2차 용역을 또 실시합니다.

죽 이렇게 계속, 제가 확인한 것만 한 여섯 차례 건의가 이루어졌는데 도로공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다고 계속 반려를 해요. 그런데 2012년도에 하이패스 확대 정책이 생기고 당연히 양평군은 즉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2013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도에 이게 개통이 되는데 그 후에도, 그 전후로도 계속 인근의 땅 매입은 이루어졌습니다.

2012년 당시에 양평군에서 이걸 신청했을 때 양평군의 예상 사업비는 80억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뀌어 가지고 한 51억씩 102억으로 됐는데 애초에는 원래 원인자부담으로 거의 다 부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 천안이 세 군데 보은 등등이 선정됐는데, 천안은 세 군데가 됐는데 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양평은 했습니다. 2012년 당시에 천안은 재정자립도가 46.6%, 248개 지자체 중 39위였고요. 그다음에 양평군은 24.7%, 122위였습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공사에서 한 하이패스 IC가 총 18개인데요. 보시면 대부분 인근에 관광 단지가 있거나 산업단지가 있거나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남양평IC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 2012년까지는 계속 반려가 됐거든요, 경제성이 없다고. 그런데 하이패스로 바뀌면서 갑자기 경제성이 1.89로 확 높아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 다른 하이패스는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거나 관광단지가 있거나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남양평IC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평군은 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IC 요구를 했을까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집적돼 있는 그런 추진 경위에 따른 경과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사장 맡은 지 1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손명수 위원** 사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런데 그게 지속적으로 2000년도부터 양평군뿐만이 아니라, 2001년 10월부터 IC 설치를 요구했는데 양평만 요구한 게 아니고 경기도 양평군 지역주민 등에서 우리 도로공사에 아홉 번에 걸쳐서 2001년도에 이것을 요청했습니다, 아홉 번에 걸쳐서. 그리고 또 2011년에 들어와서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할 때 이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한 12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2012년도 10월 달에 저희들이 하이패스 IC 후보지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총 6개 지자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효율성 B/C를 따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6개 중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 게 지금 말씀하신 경부선의 망향휴게소인데 천안시지요. 그게 B/C가 한 2.8 정도가 나왔고 AHP는 81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중부내륙선의 남양평휴게소 양평군이지요. 거기가 B/C가 1.89가 나왔고 AHP가 79점. 그다음에 경부선 천안 이것도 B/C는 1.3에 AHP가 67.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경부선의 옥산 청주시지요. 그게 B/C가 1.45에 66점.

이런 객관적인 통행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IC, 정규 IC든 하이패스 IC든 그 주변에 그런 수요가 있는 곳,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도 고려 대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B/C나 AHP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그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 하이패스, 전국의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원칙이 있기 때문에……

○**손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통상 철도역사를 만들든지 고속도로 IC를 만들든지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 모두가 원하니까요. 많은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 집 앞에 그런 게 생기기를 모두가 다 원하는데 그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양평IC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차례 10년 이상 동안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반려됐던 사업이고 나머지 18개 중에서 이것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관광지도 없고 산업단지도 없고. 그런데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계실 때 하신 건 아닌데 IC 설치 기준하고 하이패스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선정 기준 그런 걸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이 내용은 아시겠지만 명확하게 끊고 가야 되잖아요, 매듭을 짓고. 그러니까 지금 손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선정 기준하고 그런 자료를 역시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확하게 정리해서 넘어가야 분쟁을 그리고 의혹을 하나씩하나씩 해결을 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더 드린 것은 빨리빨리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HUG에서 허위 서류를 처음에 못 걸러내 가지고, 보증보험을 가입했고 그것을 특약으로 삼아서 임차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HUG가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현재 관련해서 1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고 1건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서 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보증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것이 보증보험적 성격인지 아니면 제삼자를 위한 계약인지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상급심에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격에 대해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증보험과 유사하다라고. 판결문 보셨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김희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심 신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결 나기 전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변호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변호사비 1심 기준으로 지금 17건 해서 착수금은 약

8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물어 주게 돼 있고, 여기는 물론 세금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 첫 번째 건이 얼마짜리였는지 아세요, 보증료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1억 4500만 원입니다.

○**김희정 위원** 보증금보다 더 상회하는 변호사비를 써 가면서 그렇게 서민들 눈물을 빼야 되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그런데 지금 1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하지만 착오로 인한 거잖아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HUG 직원의 착오로 인한 거라고. 이런 일이 없어도 생긴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배상해 줄지를 지금 머리를 싸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달래야 되는 곳에서 직원의 착오로 생긴 일에서까지 굳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청구를 또 한다, 이게 지금 전세사기범 척결하고 또 구하겠다는 HUG의 본정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 건은 전세보증 사고하고는 다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제 얘기는 임대보증금 사고인데 그 사고가 HUG에서 보장한 것을 특약사항으로 넣어서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방금 답변 중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1심을 못 받아들이고 지금 2심 청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적 성질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다, 방금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상급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광주고법에서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안타깝습니다. HUG의 업무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고요. 쓸데없는 변호사비 들이지 말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면 울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 줄지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든든전세주택이라는 굉장히 좋은 것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요? HUG는 왜 LH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든든전세사업은 전세보증 사고가 난 경우에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된 수도권 위주로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있습니다. LH는 매입임대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수도권에 전세보증 사고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희정 위원** 우선 수도권부터 한 다음에 앞으로 지방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만약에 성과가 굉장히 좋고 또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시장의 평가가 내려진다면 저희들이 여력을 더 받아 가지고 지방까지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지금 HUG 위치가 어디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부산에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부산에서 이 문제 겪고 있는 사람들 현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 보신 적 있냐고 여쭙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전세사기소송 관련 피해자들은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다 만나 봤었습니다.

○김희정 위원 직원들이 만나는 것하고 관계 단체장이 만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산으로 이전해 놓고서 사업에서, 심지어 LH는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HUG는 본사를 부산에 두고 있으면서 사업 대상에서 부산을 뺐습니다. 저는 부산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업에 좋은 성과가 있다면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지 거기에 ‘신중하게’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든든전세, 앞으로 어떻게 지방에 공급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희정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실에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강원도 원주율의 송기현 위원입니다.

LH 사장님, 2년 전 8월에 서울에 집중호우가 오면서 그때 반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몇 건 입으셨어요. 그렇지요? 신림동에서는 다세대주택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세 분이 돌아가신 사고가 생겼고 상도동에서도 50대 여성이 반지하주택에서 돌아가신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LH에서는 지하층주택 매입사업이라는 걸 하겠다고 22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하시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송기현 위원 아마 현재 414개가 매입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신청이 돼서 계약이 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약을 추진 중인 게 47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 빼고는 아직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도 지금 아신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하나도 없을까요? 그것 혹시 보셨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매입 조건이 너무 제약이 많아 가지고 그랬었는데 최

근에 그 제약을 다 풀었습니다.

○**송기현 위원** 매입 조건이 최근에 전체 19개가 있었어요. 몇 개 정도를 풀었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우선은 가격의 상한선이 있었는데 가격의 상한선을 전부 폐지했고 기타 저희 입장에서는 반지하를 사서, 어차피 반지하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지하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을 주거 상향 이전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송기현 위원** 반지하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용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매입 제한 조건이 19개나 됐었는데 그걸 좀 더 풀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주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LH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19개나 되는 조건을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송기현 위원**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 첫째에는 경기·인천 하고 두 번째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서울·인천·경기 이렇게 세 군데만 대상 지역으로 하셨어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올해에도 보면 대전 지역의 반지하주택에 침수가 생겨 가지고 119에서 출동을 해서 물을 빼는 이런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행안부가 반지하주택이 267개를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267개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서 보면 경기도 73개고 서울이 68개고 부산이 43개예요. 그러면 지방에도 충분히 있다는 얘기인데 대상 지역에 지방은 싹 빠졌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 보면 대전에도 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산도 행안부 발표에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이게 빠져 있어서 오히려 그것도 실제 성과가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공항에 그냥 불법으로 막 갖다 놓은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 있고 또 주인이 있는데 그냥 쌓아 놓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동안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공항 내에 막 적치해 놓은 것, 무단으로 적치가 아니라 그냥 방치해 놔 가지고 그것을 왜 방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련 규정이 있는데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보도 났는데 아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뉴스에 나오자마자 다음날 짝 없어졌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알고 계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송기현 위원 지난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무감하지만 만일 외국의 존에프케네디 공항 같은 그런 데 그런 게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누가 갖다 놓은 수화물 같은 게 뭘 줄 알고, 폭발물일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특히 미국 공항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최근에는 또 보파리 장사하시는 분이 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일부러 적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항공사에서 보도가 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아마 치운 것 같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국민적 관심이기 때문에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 주인이 없는 방치폐기물이 있으면 이것은 대테러상황실로 바로 신고를 해 가지고 폭발물처리반이 긴급출동을 합니다. 펜스를 쳐 놓고, 그래서 그것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주인이 없는 방치폐기물이면 그것은 유실물 신고를 해 가지고 유실물센터에다 갖다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있지만, 보파리 장사들이 쌓아 놓는 이 부분이 문제인데 어쨌면 이걸 약간 역설적이게도 인천공항이 워낙에 보안이 잘돼 있으니까 주인 외에는 그 누구도 그걸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좀 쌓여 있고 보기도 안 좋고 또 인천공항의 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계고를 하고 거기다 계고장도 붙이고 주인한테 연락도 하고 이랬던 절차를 가급적이면 최단기간 내에 하고 바로 치우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하는 문제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실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송기현 위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규정을 잘 만든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공항은 안전한 한니까 갖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큰일인 겁니다.

인천공항 이용 숫자가 얼마지요? 20만 좀 넘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한 개 도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라도 폭발 사고가 발생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집행하지 않는 게 문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래서 저희가 주인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 수화물 자체에 네임택이 있다든지 연락처가 있다든지 하면 바로 연락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주인이 없는 거니까 폭발물 처리반이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있을 때 주인한테 연락하고 하는 건데 그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주인이 바로 안 치우면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문제이니 까요 사장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적으로 보완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에 저희가 국정감사도 있고 아마 지속적으로 체크가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게 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윤종오 위원 특별법에 기존 안은 30%였고 제가 낸 개정안은 보증금의 50% 정도 되 는데요. 최소한 몇 프로 정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최소보장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정부안에는 그게 빠졌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윤종오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저희는 지난 5월 27일 발표했던 정부안을 기반 으로 해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고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 면 최대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하여튼 소위 의견 과정에 전향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되 면 수용하겠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법안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 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 정부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 개정안에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10년 동안 제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는 피해자가 직접 이전이나 질병 등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대책을 마련한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하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 자체를 최대한 완화하고 있고요. 특히 출산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가구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윤종오 위원 별도로 대책을 좀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검토가 아니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를.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윤종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는 아무나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거하고…… 일단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도공사.

철도공사는 4조 2교대 변경승인과 관련해서 인력 충원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윤종오 위원 지금 업무가 유사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SR 등은 4조 2교대로 다 전환했지요.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런데 철도공사는 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2018년도 10월 달부터 19년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2020년도 1월부터는 근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윤종오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개편이 안 되고 4년 6개월 동안 계속 시범운영도 아닌 것이 아주 그냥 비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개편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시범운영이지만 실질적으로 4조 2교대 형태로 교대근무자의 90%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비정상적이라고 하나면 지금 교통안전공단 의 심의를 받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4년 6개월 동안 진행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른 비슷한 단위들은 다 끝냈거든요. 결국 인력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력 문제잖아요, 3조 2교대 하다가 4조 2교대를 하니까.

만약에 한 부서가 12명이라고 가정하면 전에는 4명씩 3개조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3명씩 4개조로 하는 거잖아요. 4명 하던 일을 3명이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 문제

나 또 인력 문제 때문에 휴가를 마음대로 못 간다거나 질병이 있어도 아파도 마음대로 휴가 내기 어렵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다른 사업장들은 그렇게 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승인을 요청했는데 여러 번 빠꾸당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빠꾸는 아니고요 아직 뭐 결정적으로 검토, 계속 그런 상태이고요.

○**윤종오 위원** 계속 보완해 달라고 하는 게 빠꾸지, 그게.

승인을 못 받은 거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윤종오 위원** 못 받은 이유가 철도공사는 3조 2교대 대비 조당 인력이 부족하고 일근자 감소에 대한 인력 운영 적정성, 위험도 평가기준이 미달돼서 못 받은 거예요. 그걸 충족시키려면 인력 충원이 필수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임금피크제 인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정원이 3만 560명 현원이 2만 9684명 이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876명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교대근무는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그거하고 있고. 이것을 마지막에 적절한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서 합의해 가지고 평가를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맞습니다. 지금 충원 중에 한 94%까지는 인력을 맞춰서 노조랑 협의해서 안전체계 승인 진행 중인 거고요. 나머지 한 6%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충당할 인원이 부족해서 아직 변경승인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종오 위원** 충당할 인원을 뽑아야지 되는 거지 뽑지 않고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한 해 한 해 계속 퇴직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충당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기재부하고 인원 충원이나 이런 문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협의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것이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승인도 안 받고 사실상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위원님 지적처럼 좀 빨리 정착시켜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인력이 늘어나지 않는데 정착이 됩니까, 안 되는데.

그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4년 6개월 지났어요. 할 수 있는 날짜를 한번 뽑아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날짜를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요. 어쨌든

정부하고는 지금 충분히 협의해서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6% 정도 남은 게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노동조합에서도 부분적인 외주나 이런 걸 통해서 하거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현원 차 가지고 좀 충당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분적인 외주 이거 다시 공공기관에서 시작한다면 또 다른 외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예요. 앞으로 부분적인 외주 이런 이야기를 가능한 한 들고 오지 마세요, 여기 국토위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다가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발언시간을 더 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중간에 적절하게 추가질의시간을 줄이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발언시간 가지고는 제가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주택토지실장이 얘기할 때 자꾸 ‘정부안’ ‘정부안’ 얘기하는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수정안을 정부안을 낸 게 있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실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권영진 위원** 실장님, 정부안을 따로 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아닙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왜 ‘정부안에서는’ ‘정부안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부안으로 5월 27일 날 발표했던 정부 대책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발의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내용입니다.

○**권영진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속기록에서 ‘정부안’이라는 건 삭제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정부 협의안’.

○**권영진 위원** ‘정부 발표’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부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없는데 그것을 마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계속……

○**위원장 맹성규** ‘정부 발표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여당하고의 긴밀한 업무 협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를 안태준입니다.

김규철 실장님, 다시 한번만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주택정책을 하다 보면 주택사업 승인·착공·준공 문제로 사실은 국토부에서도 편의대로 뽑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일부 신문보도에 ‘공급이 반토막 나서 매매·전세 다 쪼들다’ 이러니까 국토부에서 ‘준공 물량은 2배로 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사업이 계획하는 것 빼고 승인 이후에 준공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안태준 위원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좀 더 걸릴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9년에서 10년 가까이도 걸립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신도시 사업이고 승인 이후에도, 왜냐하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승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인 이후에도 바로 착공을 준비해서 한다고 그래도 최소 40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국토부에서 쓰고 있는 준공 물량은 다 전 정부에서 착공을 했던 물량을 준공 물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표 4번 한번 띄워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허가 실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인허가 보니까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22년에 취임하시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그래서 나중에 270만 호 건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맞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렇게 하면 1년에 평균 한 50만 호 이상 승인을 해야 되는 거고 착공도 그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지금 23년부터 착공이 줄었고, 제가 어디 보니까 승인이 좀 줄었고 누락된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반영을 하더라도 50만 호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년 5월까지 보니까 12만 5974호 이렇게 돼 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아마 한 30만 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연말에 다 몰아서 승인하는 게 있으니까 저게 좀 더 될 수 있다고 보고.

7번 한번 보세요.

연도별 착공 실적을 보니까 올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실적, 9번 한번 봐 보세요.

9번을 보면 올해까지 46만 호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쨌거나 저게 전 정부에서 다 착공이 돼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 주택사업 승인부터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 기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승인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착공하고 있는 물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삼 년 후에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다 신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 감안을 해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LH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시 4번 띄워 보시지요.

4번 보면 이게 지금 인허가 실적입니다. 저기 빨강게 ‘82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5월까지 LH에서 인허가 낸 물량입니다.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다 몰아서 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했던 얘기 중에 보니까 10만 5000호의 사업 승인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사업 승인 추진을 보면 앞으로 10만 5000호를 다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사업 승인 추진을 하고 나서, 밑에 보면 ‘24년 5만 호 착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안태준 위원** 지금 사업 승인해서 착공 올해 다 할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825호 140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태준 위원** 어떻게 5만 호를 하시겠다는 얘가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5만 호 착공은, 과거에 저희가 인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을 안 한 것이 45만 호였었는데 그게 계속 소진되면서 현재 한 20만 호 정도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당겨서 하고 3기 신도시 당겨서 5만 호 착공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인허가 대상 지역에다가 설계부터 하기 때문에 한 칠팔 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 11월 12월 해서 5만 호 착공은 차질 없이 이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0만 5000호의 경우에는 그전에는 사실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 개발을 정부가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인허가가 들어가려면 상당 시간이 흘러야 되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13년부터 18년도까지는 신규 택지 공급을 정부가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문재인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달에 발표한 것을 착공을 하려면 부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최소 6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부 당겨서 1만 호 하고 내년엔 1만 5000호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제시한 대로 인허가 10만 5000은 금년 연말에 차질 없이 이행할 거고요. 착공 5만 호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태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에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범수 위원** 울산 울주군 출신 서범수입니다.

부동산원 원장님 잠시만 나오시지요.

원장님,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제가 21년 2월 말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원래는 24년 2월 25일까지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후임자가 안 정해져서 계속 게시는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서범수 위원 지난번에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해서 한번 홍역을 치렀는데요. 감사원 감사하고 검찰 수사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검찰 수사는 끝이 났고요 감사원 감사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서범수 위원 수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수사 결과 발표한 것은……

○서범수 위원 부동산원 직원들은 전혀 기소는 안 된 거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안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국토부하고 청와대만 11명이 기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서는 법적 책임을 모면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현재로서 기소 대상은 없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전혀, 법적 문제는 모면했고.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그런 일로 해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을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서범수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검찰 기소는 안 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책임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범수 위원 아마 제가 보기에선 실행인으로서 그냥 위에서 결정한 것을 우리는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기소가 안 된 걸로 제 나름대로는 추측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실행은 했지요? 실행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서범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때 통계 조작의 실행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부 승진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감사원 감사 받을 때 그 기간에. 맞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일부 승진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전부 다 승진한 것은 아닙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 승진은 했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서범수 위원 제가 특정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부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받을 때 승진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 난리법석을 치르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그렇지요? 2023년 1월 1일입니다. 그렇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잘했다고 승진시켜 준 거지요, 원장님 입장에서?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 일을 잘했다고 승진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경력들이 많이 있고, 그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일도 했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보통 행정기관을 보면 감사원 감사 대상으로 됐을 때는 승진 못 시키는 게 맞는데,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이 주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서범수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렇게 실행을 잘했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 줬어 하고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다음 국감 할 때 한 번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그때 그 실행자들이 승진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인천공항 사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서범수 위원 인천공항은 국가에서 지정한 가급 보안시설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서범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경비 총괄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경비에 대한 총괄 책임은 경찰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공항시설의 보안 및 공항안전에 관한 사항,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부 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죄송합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을 왜 경찰에 넘깁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연예인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설경비 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서범수 위원 이것 최종적으로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이것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예인이 나가게 되면 사설경비……

○서범수 위원 제가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총괄적으로 공항공사에서 뭔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지금 대책 나온 것은 현장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야기만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술하게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범수 위원 뭔가 대책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공항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경찰이든지 관계기관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현장 통제만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차후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가지고 관계기관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님과 또 LH 이한준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부 발표안에 몇 가지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향적 대책을 담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점검돼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한준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염태영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 세 번 하면서 그때마다 나오셔서 곤혹스러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도의 미비로 지금 이 뒷수습을 LH가 온전히 떠맡고 있는 식이 돼서 상당히 곤혹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해서 겪어야 될 데가 또 LH라 LH께 우선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난번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LH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위반건축물 매입과 관련돼서요. 가급적 위반건축물을 매입해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 고맙게 생각하고 그 취지는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국토부와 LH는 세대 분할 주택, 즉 주택 1호를 2호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없이 그 자체로 사용승인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문제요.

두 번째, 위반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아마 그에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외부용역 또 원상복구 비용, 다중주택 리모델링에 따르는 인력과 재정 투입 이런 것이 제법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라도 해 봤는지.

또 용도변경을 한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개선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럴 때 지자체장의 권한인데 이 부분을 강제하는 건지 협조를 구하는 건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따져 봤는지, 지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우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철거나 구조진단과 관련해서는 그 물건들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위반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지자체 권한인데 이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어차피 특별법을 의원님들께서 만드시는 과정에서, 지자체장님들이 현재 권한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특별법에 담아 가지고 강제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어차피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이끌어서 지자체와 협의해 주시면……

○**염태영 위원** 저희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의 입장이 필요한 거니까 이따가 실장님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가구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위해서 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다 그랬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염태영 위원** 몇 회나 했고, 이게 때에 따라 선순위·후순위 채권자들이 다가구주택 피해자들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어요. 이해가 상충되는데 이 설명회가 실제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서 다가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파견 나가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회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설명회는 다가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을 하고 피해자 간의 합의·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것하고 또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다가구주택 후순위 피해자도 경매차익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매입 실적이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질의시간이 워낙 없어서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답변을 해 주고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해서 협의매수가 지난 1년간 5건의 매입, 262건의 공공임대 제공 이런 식으로 300건이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 피해가 1만 8000건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데 이것이야까 답변으로는 경공매 유예가 풀리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워낙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별로 해석해야 될 권한을 LH가 전결권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갖고 있기는 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부가 그런 권한을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염태영 위원** 왜냐하면 LH의 감정이 평가에서도 아까 사장님께서서는 국회와 적극 협력해서 국회의 제안 방법 수용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아마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보다 신축적으로 유연하게 LH가 현장의 사정을 반영한 전결권을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LH가 매입임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아까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실제로 LH의 이런 매입임대 방식으로 하더라도 상당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사실상 경매차익이 전혀 없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10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운영비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최소한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액을 반영해 주는 방법에 대한 정부 의지를 실장님과 사장님께 각각 여쭙고 주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화하는 과정에서의 지자체 권한 문제는 그동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서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피해자를 최대한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 실제 그게 LH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려하신 지자체 권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소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다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발표했던 대안의 가장 핵심은 일단 피해자들이 10년간 20년간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자가 공히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최소한의 변제금 최소한의 보증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달라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저희 생각으로는 그때도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10년 20년간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에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사항이고 이번에 의원입법 발의된 내용 중에도 일단 그런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위원님, 김규철 실장께서 말씀하신 10년의 경우에는 10년 거주하는 데 소요되는 임대료를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월 30만 원씩 12개월 해서 10년이면 3600만 원이 소요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평균 임대료 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3600만 원 24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경매차익을 통해서 100% 보증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따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런데 최소한의 보장이 전혀 해당되는 게 없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염태영 위원님이 이것저것 질의를 하시는 것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부하고 LH가 자세히 준비를 해 오십사하는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답변 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건 있는데 수도권의 임대료가 30만 원이라고 그러셨는데 30만 원으로 임대가 어떻게 가능한지 나중에 법안 심의할 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문성요 국토부 기조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페달 블랙박스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 날 페달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 관련 간담회 진행하셨지요,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모빌리티자동차국 소관입니다만……

○**윤종군 위원** 급발진 관련 페달 블랙박스 의무 장착 관련해서 자동차 제조사들과 7월 12일 날 간담회 하신다고 장관님이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제 소관이 아니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모르세요?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는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윤종군 위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 관계자하고 자동차 제조사만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된 민간 전문가들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페달 블랙박스 의무 장착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민간 전문

가들은 아예 배제되었고, 의무 장착이 어렵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자동차 제조사만 불러 놓고 간담회를 한 겁니다.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날 회의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받은 회의 결과입니다. 저거 한번 꼼꼼히 읽어 보세요, 저게 제조사들에게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하려고 한 회의의 결과인지.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빨간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제작사가 전후방 블랙박스 설치 시 외부 제작업체의 제품을 구매·장착하고 있으며 현대·기아차만 대부분 차종에 빌트인으로 장착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시장점유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군 위원 제가 알기로는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가 빌트인으로 장착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 자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입사는 차량 안전과 연관성이 적어 본사 설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수입사는 제조사가 아니잖아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는지, 저 자료를 보고 어디에 국토부가 의무 장착을 업계에, 자동차 제조사에 적극적으로 권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저기?

제가 조만간에 국토부하고 자동차 제조사하고 의무 장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민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이거든요. 국토부도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가 많았고 시청 앞에 사고가 난 게 7월 2일이었습니다. 국토부가 5000명이 일하는 거대 부처인데 거의 보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수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 페달 블랙박스를 포함하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이 보험료 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내에서 그동안 검토돼 왔던 의견이 좀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부처에서 긍정적으로 의견을 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전에 모 언론의 단독 기사를 보니까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면 과징금을 최대 75% 깎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단독기사가 났습니다. 사실입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균 위원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과징금을 깎아 준다는 얘기는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답변이 너무 교과서적이어서 가지고, 장관님이 계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서 장단기 정책이 다 필요한데 우선 급하게라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소비자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이걸 최단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조 과정에서 의무장착을 추진해 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사이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진실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나 조사인력을 확대하는 등을 통해서 가부간에 진실 규명을 빨리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좀 종합적인 대책, 단기 대책, 중기 대책, 장기 대책 이런 것을 국토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문성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님.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정점식 위원 윤종균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급발진 사고다라고 하면서 교통공단의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2012년부터 해서 한 731건 신고되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중에서 이게 급발진 사고다라고 밝혀진 게 몇 건입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지금 현재까지 차량 결함이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정점식 위원 0건이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정점식 위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 이 문제는 소위 일종의 피해자, 그러니까 운전자한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호하려고 그러면 결국 입증책임을 완화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21대 국회에서도 그런 법안이 발의됐고 아마 국회에서 관련 논의하는 것에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청한 증거를 제조업자가 공개하지 않으면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해서 피해자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증거에 대한 약자인 운전자들이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지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소위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지난 7월 초의 서울시 청 앞 사고와 관련된, 그 이후에 페달 블랙박스에 대한 검색량이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보도는 보셨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정점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거나 또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의무화보다도 여러 가지 국제 기준이나 통상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권고로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논의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문제됐을 때 리콜에 대해서 과징금을 감경하든가 보험료 할인을 하는 정책이 현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준 사장님, 지금 경남 통영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에 국토부로부터 전국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봉평지구라는 데인데 이 부지가 이전에 신아SB라고 조선소 부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부지를 LH에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과정에서 현재 토지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소위 1지구, 그러니까 전체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 수준의 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LH는 입장이 어떠신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상향시켜서 정화를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염토의 공유수면 유입 차단을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해 가지고 시공 중에 있고 오염토가 해안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해양퇴적물에 대한 오염실태조사 및 정화에 관한 사항은 국가 및 지자체 관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5월 통영시에서 경남도로 실태조사를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영시와 경남도와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1·2·3지구가 있는데 1지구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인데 토지정화사업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2지역 구간이 임야·하천·체육용지 부분 그리고 3지역이 공장 이런 지역인데, 이 3개 지역을 단계별로 수준을 나눠서 정화사업을 할 게 아니고 주거지역 수준으로 모든 지역을 다 대폭 상향시켜야 된다는 그런 지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냐의 여부에 따라서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굉장히 토지가 넓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토지오염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답 좀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LH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이소영 위원**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전청약받은 분들의 기대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이소영 위원** 사장님, 아파트 공급하는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아파트의 가격 그리고 입주가능 시기,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신혼희망타운을 사전청약해서 당첨된 전국의 신혼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LH가 제시한 입주 시기를 전제로 해서 출산 계획도 짜고 아이들 학교 계획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LH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단지 중에서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 무려 19개 단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19개소입니다.

○**이소영 위원** 세대수로 따지면 1만 300호이고요. 한 가정당 3명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3만 명이 넘습니다.

가장 심하게 연기된 곳이 얼마나 연기됐는지 아세요?

군포 대야미지구입니다. 본청약 예정 시점보다 38개월이 뒤로 밀렸습니다. 3년 2개월이지요. 제가 입주예정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3년 2개월이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본청약이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입주 시점이 늦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늦어진다면 분양가도 원래 제시된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전청약이 2021년에 부동산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소영 위원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깐 이번에 중단을 하신 건데요. 기존의 이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입는 손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올해 5월 3일 날 갑자기 이런 통지문이 날아 왔다는 거예요. 본 청약 몇 달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1년 정도 늦어진다, 그런데 입주 일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1년 후에 알려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저도 당시 저런 안을 냈을 때 상당히……

○이소영 위원 정말로 황당하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황당하고……

○이소영 위원 한두 달도 아니고 입주가 1년이 넘게 늦어진다, 뭐 2년 3년 늦어진다, 그런데 언제가 될지도 정확하지 않다. 이분들은 살고 있는 기존 집 임대계약 어떻게 해야 될지부터 판단이 안 설 거고요. 애들 학교 문제도 진학·전학 계획 다 세웠을 텐데 다 꼬일 거고요. 분양가가 예상보다 몇천만 원, 1억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분양 자체를 재고해야 되는 사정이 되겠지요.

다른 단지에 청약 넣었으면 분양가 상승 전의 가격으로 분양받았을 거고 예정 시점에 입주했을 거고 그런데 갑자기 이도 저도 아닌 처지에 놓여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지연손해에 대해서 LH가 일응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소영 위원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데 유감스럽게 저희 공사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소영 위원 없습니까, 아직 보상 계획? 있는지 없는지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구체적으로 일부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소영 위원 사장님, 우리 계약법에서는요 공급자 귀책사유로 제때 공급을 못 해서 수요자가 계약해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 배액상환이나 이런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전청약 단지들은 계약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법적 기대를 받고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금 배액상환 같은 배상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입주 지연,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데 LH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는다. 이게 공정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전청약을 해 놓고 본청약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논의도 많이 하고 줌야단도 했지만……

○이소영 위원 사장님, 사장님의 어떤 송구한 말씀 이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단지들 본청약할 때 분양가격 상승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것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입주 지연이나 원자재가 상승은 이분들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사전청약 때

제시된 추정 분양가를 가격기준으로 해서 본청약 분양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래서 저희가 가격을 사전청약 시 제시된……

○**이소영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종합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사업 주체 측의 사유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할인이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든 잔금 분할납부든 어떤 손실을 보전해 주려는 노력을 LH가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부분적으로는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강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7월 중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게 이소영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자료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일단 계약금을 원래 10%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금을 5%로 낮춰 주고 또 중도금을 2회에 걸쳐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중도금을 1회로 하고 나머지는 잔금 치르는 시기로 넘기고 하는 등등의 그 안을 정부가 마련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별도로 보고를 이소영 위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배포를 하시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언뜻 얘기 들어 보면 지원책 같지가 않거든요. 하여간 대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 김기표입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님 계신가요?

실장님, 부임하신 것이 2024년 7월 1일이신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다음날 보니까 대한항공 승무원이 실탄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지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받았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바라보고 계신 입장이 뭔지 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 승무원이 공항에 들어가면서 실탄이 있었고 보안

검색에 걸렸습니다. 사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일이 있거나서 바로 즉시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다가 재발방지 대책도 강구하도록 별도로 지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재발방지 대책 보고를 받으셨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지금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김기표 위원** 그때 바로 즉시 했는데 아직도 보고는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지금 충분히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PPT 좀 띄워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날 7시 30분에 실탄이 발견됐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지요. 32분에 실탄이 확인됐고 그다음에 38분에 현장감독관이 공항보안통제실 및 대테러상황실에 통보를 했고, 50분에 국정원 및 폭발물처리반 도착 후 해당 물품 확인 및 해당 승무원 인터뷰 실시했습니다. 7시 55분에 경찰단 방첩사령부 도착 후 합동수사를 실시했고, 7시 반에 보안검색한 후 1시간 뒤인 8시 30분에 승무원이 해당 물품 포기한 후에 정상 출국이 됐어요. 그래서 적발 1시간 만에 출국이 됐군요. 그리고 7월 4일, 이를 후에 입국이 돼서 7월 5일 14시에 조사를 받는데.

실장님, 그 조사 과정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 있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실탄이 발견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승무원이 뭔가요? 항공 승객들의 안전사항을 관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감독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런데 실탄이 발견된 사람, 예를 들어서 대테러 관련해서는 그것이 승무원이든 승객이든 전혀 차별이 없이 취급이랄까요 대처가 돼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관리감독을 해야 할 승무원에게 실탄이 발견됐는데, 그때 아마 진술한 내용이 우연히 어떻게어떻게 해서 얻은 실탄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얘기 하나 듣고 지금 출국을 시켰단 말입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 볼까요?

이게 지금 승무원 스탠바이 크루 편성이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승무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 비상으로 근무하도록 이렇게 조가 짜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연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저는 이 경우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3명이 비상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상상을 해 봅니다. 빈 총기라도 총기가 발견됐으면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런데 지금 사람을 살상하는 실탄이 발견됐고, 테러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비행기라는 것은 사고가 한 번 일어나면 거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모두 다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비행기도 아니고 또 대한항공이라는 국적 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다시 한번,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점검도 돼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대한항공에서 비상대기조를 짜 놔는데 과연 그날 스탠바이 크루가 정말 제대로 편성이 돼 있었던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편성을 해 놓고 실제 비상대기를 하려고 하니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위험에 처한 인물을 내보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그것도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아마 이것은 수사 과정이라서 경찰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는데 국정감사 정도 되면 그 경위가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질문했던 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실탄을 소지했던 사람이 출국이 됐는지, 그다음에 비상대기조 편성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이 진술을 했고,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알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각 기관장님과 또 각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갑구의 윤영석 위원입니다.

코레일 한문희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철도의 화물 또 여객 수송분담률이 어떻습니까, 국제비교를 하면?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낮은 편입니다.

○윤영석 위원 낮은 편이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특히 화물은 더 많이 낮습니다.

○윤영석 위원 화물은 지금 거의 한 자릿수이지요, 수송분담률이?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냥 양으로 하면 한 1.4% 정도 되고요. t·km라는 것으로 하면 한 3.3~3.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화물 물류의 분담률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어떻습니까? 앞으로 향후에 예를 들면 KTX 차량에 화물 수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금 열차 특송품으로 일부 KTX는 나르고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분담률을 높이거나 이럴 정도의 양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향후에?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격경쟁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이 국제복합운송 추진하는 것을 통해서 늘리는 방안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는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한 30량 편성으로 가던 것을 50량까지 늘려서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철도의 승객이나 화물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성해 이사장님, 지금 경기도 평택-충북 오송 간의 복복선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몇 년도 완공이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27년.

○**윤영석 위원** 27년?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윤영석 위원** 그러면 28년부터 이게 운행이 됩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철도의 여객 그리고 화물 수송분담률에 대해서 코레일하고 공단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중장기 전망을 한번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렇게 하고. 코레일 사장님, 앞으로 철도의 이런 수송분담률을 확대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의 경영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부채도 한 20조 정도 되고 또 최근에 전기요금도 보니까 상당히 급증세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위낙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각종 철도 수선에 따른 재료비 이런 부분도 많이 늘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경영 수익구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다년간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경영성과평가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기본적으로 수익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을 해야 돼서, 수익은 특히 KTX 같은 경우는 계속 수혜지역을 확대하고 또 최근에 해외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인력 운영의 최소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것은 향후 계획되어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부채 절대액이 줄어들면 형편이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의 운임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도와주면 잘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경영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한준 LH 사장님께서도, 지금 LH 총부채가 한 150조 되고 연간 이자만 2조 원 부담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또 전 정부 시절에 LH 사내에 상당한 국민적인 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한준 사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데, 최근에 LH 분양대금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 7조 원 정도. 정책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현재로서는 연체가 좀 있지만 충분히 유동성 확보나 국책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윤영석 위원** 문제없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윤영석 위원** 그리고 보니 임대주택사업을 지금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건설·매입 임대주택 공실이 한 5만 호 정도 있습니다. 일부 석문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80% 이상이 공실인데 당초 사업 구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공실률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위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저도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KTX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가되어서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동의를 하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사장님이 다 못 들으실 수 있으니까 담당자 오신 분 있으면 메모해서 저한테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X 열차 운행계획은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집니까,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열차 운행계획은 건설계획에 맞춰 가지고 짜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열차를 운영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 장래 그 지역의 발전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수립을 합니다.

○**이춘석 위원** 알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출발하는 KTX, 전부 다 익산역을 거치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목포도 거치고 전라선 여수도 거치고. 익산에 내렸다가 다 갑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차량이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호남선이 어떻게 배차가 되는가를 다 알 수 있는 것, 그건 맞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이춘석 위원**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 서울로 열차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왜 아침 시간에 차표 구하기도, 차가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한번 보니까 정말로 기차 딱 1대만 타고 오면 용산역에서 호남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회의원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PPT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침부터 익산역 기준으로 8시 20분까지 출발하는 KTX 열차입니다. 총 5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2대는 서대전을 경유합니다. 서대전을 경유하는 경우는 익산에서 2시간 20분 걸리고 밑에서 걸리기 때문에 안 탑니다, 사실은. 이건 KTX지만 KTX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 출근시간에 딱 3대가 출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배차시간을 한번 봅시다. 배차시간을 옆에 써 놔습니다. 8시 20분 406 열차가 1시간 8분 만에 도착하는데 서대전 경유를 빼면 1시간 29분 만에 KTX가 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간대를 많이 차지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근시간대에 호남선 전라선에 배차해 주는 출근용 KTX는 단 3대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십시오.

저것은 동일한 시간대에서의 용산에서 호남으로 출발하는 기차입니다. 총 9대가 출발합니다. 그중에 2대가 서대전을 경유하니까 빼면 7대가 됩니다. 이것은 가장 넓은 시간대의 배차 기준이 41분입니다.

그러면 상행선 같은 경우는 그 황금시간대에, 출근이 가능한 시간대에 5대밖에 안 들어오는데 왜 그중에 서대전을 경유하는 차를 2대 배차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 왜 그럴까? 내려오는 차는 똑같은 시간대에 오려면 9대를 배차하는데 올라가는 시간대는 왜 5대 배차밖에 많지? 그리고 왜 그건 서대전역을 넣어서 최소 1시간 29분 만에’. 그래서 10시에 맞춰서 국회를 오려고 하면 탈 수 있는 기차가 딱 하나예요. 그러면 전부 용산역에 다 내려서 옵니다.

자, 이런 운행계획이 합리적입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이춘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뒤집어 보면 차가 똑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익산의 경우나 호남 대부분의 경우에 서울에서 익산이나 다른 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 많습시다. 다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공사의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익산은 지방국토청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출근시간대에는 차량 많이 배차해서 마음대로 타고 올 수 있고 익산에서 호남에서 올라오는 사람 출근시간대에는 차가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복잡해요. 그러면 저는 이게 바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지역은 출퇴근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 서울은 출퇴근할 수가 없게 만든 겁니다.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나가는 분들, 아침에 딱 가서 제가 기차 타고 올라오면 무수하게 내립니다.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KTX가 이런 식으로 운행계획을 짜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합리적인 것인지, 대안이 있다고 하면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님,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유력 인사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건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서대전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깐 그것도 숨길 게 없지요.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박용갑 위원님이 손 들잖아요. 뻔하게, 그걸 설명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왜 서울 출발이 많은지를 설명하셔야지요. 그것도 당연히, 이게 다 설명이 될 만한 건데.

나중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준석 위원님하고 박용갑 위원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여러 가지 상황 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해 주셔야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장 맹성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깐.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님께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누구 책임이냐고 여쭙신 것 같은데 ‘설명하기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설명할 게……

○**전용기 위원** 길다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용기 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요. 누구 책임인지, 인천공항에서 무엇이 미흡했는지 그 정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인천공항에서 이런 일이 지금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못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고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경찰과 함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안전규정을 미준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공사의 관리 소홀이다 이런 지적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항공사는 아까 서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 보안시설이고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곳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더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경호하기 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원래 경호는 사설 경호업체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경찰의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공사에는 통보 안 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공사는 경찰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전용기 위원 만약에 사설 경호업체가 이렇게 자해적으로 해석해서 통제를 하려고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접 경호는 사설 경호업체가 하고 있고요. 저희는 후방에서 민간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연예인의 안전을 책임지기보다는.

○전용기 위원 근접 경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항공사에서 준 것 같은 참고자료 보면 게이트 통제를 했어요, 경호업체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게이트 통제 어디서 합니까? 직원들 다 있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 직원들이 분명히, 한 48초 했다고 언론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짧은 시각이긴 하나 48초 동안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통제를 적절하게 했어야 됐는데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의 책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초에서 40초 그사이에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 없이 게이트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도 물을 것이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위기 대응 매뉴얼이 부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후속행정입니다. 가급 보안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답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했는데, 여기는 외국인도 많이 오는 곳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전용기 위원 외국인들한테 사설 경호업체에서 플래시 사용해 가지고 사진 촬영 방해 목적으로 했다는데, 눈을 밝히고 그리고 항공권 검사를 본인들이 직접 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직원들이 통제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항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 저희가 그것을 방치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불법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오면서 연예인하고 연예인을 찍는 사진작가들하고 떼어 놓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플래시를 비추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용기 위원 사장님, 다른 공공장소에서 해도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인 것은 명백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건 불법행위 맞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사실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호업체가 들어올 것 뻔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과잉 경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알았어야 되는 거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아니, 알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전용기 위원 협의되지 않은 통제는 관리 부실이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에 수백 명의 연예인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도 지금과 같이 엉뚱한 행위를 한 사설 경호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견을 못 했던 거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조치계획에 보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 재발 방지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내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사설 경호업체가 공항 내에서 하는 그런 행동준칙 같은 것들을 경찰과 협의해서 만들고 그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규정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위원장 맹성규 보완하셔서, 이건 아마 국정감사 때 공항공사 감사에서 별도로 따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용납이 돼야 될지 이런 것은, 관리 주체의 책임자는 공항이거든요. 그것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님,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아마 경찰에 있을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현장 관리는 공항공사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현장에 즉각적으로, 돌발 상황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조치가 조금 부족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관계기관들 통상적으로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하고 계시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윤재옥 위원 차제에 한번 의논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LH 사장님, 지금 TK신공항 사업에 SPC가 참여하기로 MOU 체결하셨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지역본부에서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또 사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토지보상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토지 비축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윤재옥 위원 알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윤재옥 위원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겠지만 지금 MOU 체결해서 SPC도 참여하기로 약속한 만큼 토지보상 절차가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토지 비축사업 이게 또 채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토지 비축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국토부에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제가 서면질의할 텐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어떤 마을의 교통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고속도로를 지으면 보통 양쪽 분리된 마을을 위해서 통로를 고속도로상에 만들어 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교통 사정이 바뀌어서 통행량이 늘어나서, 처음에는 차량 숫자가 적으니까 작은 통로로 통행이 용이했는데 이게 교통량이 늘어나서, 한쪽으로밖에 통행이 안 되니까 양방향 통행이 안 되니까 한쪽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미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나서 추가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돈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하고 도로공사가 협의해서 분담을 하든지 그런 정도의 개선책을 내놓아야지 지금 마을이 분리되고 교통환경이 바뀌었는데 이미 다 지었으니 도로공사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그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는 도로

공사인데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지적해 주신 것에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앞으로 향후에는…… 이게 법적인 문제인데 관련 법을 검토해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고속도로 처음 할 때 그 계획에 반영됐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고속도로 건설하고 나서 추후적으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에서 요구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을 명시해 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제가 도의원 할 때는…… 지방도, 국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분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로를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놔기 때문에 교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차가 많이 부딪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것은 전면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소위 말해서 탱크도 좀 지나갈 수 있고 그렇게 제가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리되는 것은 관련 법을 국회에서 고쳐 주시든가 이렇게 하고, 전국에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개정하고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적절하게 배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해결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제가 가능하면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이게 법 개정을, 도로국장 나와 계시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도로국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이런 것은 법을 개정하면 기재부에 제동이 걸려서 법이 되겠어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지금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유사한 말씀을 하신 게, 총 사업비 관리지침에 들어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 당국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게 국토부 법이에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 관리지침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요구한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사장님은 앞으로 하는 것은 좀 여유 있게 하겠다는 그런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정확한 그 상황을 파악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주변의 교통량을 조사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는 경우 이런 건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생각을 해서 다음에 회의 열릴 때 대안을 제시하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것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국토부하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세요.

다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광주 북구갑 정준호 위원입니다.

철도공사 사장님, 여쭙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먼저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께서 KTX 관련된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몇 가지 제가 더……

슬라이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부선하고 호남선의 KTX 요일별 운행 횟수를 제가 한번 받아 봤는데요. 우선 딱 보기에요 평일에도 호남선이 한 55회 정도 배차가 되는데 경부선은 지금 2배가 훨씬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주말 금·토·일 편수를 보면요 경부선은 113편에서 135편까지 늘어나는데 호남선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그다음에 배차 시간 현황을 제가 보여 드리면 용산에서 광주 내려오는 것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 38분 동안 운행을 안 하는 시간대의 공백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1시간 이상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편수는 없어요. 이게 두 가지 다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 개선해 주실지 말지 얘기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주말의 변화의 문제는 아마 여러 가지 수요나 가용 차량 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시간 이상 문제는 통상적으로는 주중 점검 시간이 있어서 보통 그런 1시간 정도 벌어지는 틈이 있을 텐데 지금 경부선 건은 그런 경우가 없다라니 제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것 파악해 보시고 개선해 주실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있거나 그러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좀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 주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여러 가지 차량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계속 나오는 오송-평택 간의 선로 슬롯(slot)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가능하다’ 이렇게 딱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말씀드립니다.

○정준호 위원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하고 박용갑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실 때 맞추어서 이 내용 꼭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리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다음에 코레일 사장님한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철피아’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정준호 위원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철도 관련 업 근무자와 업체들 간의 어떤 유착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작년 2023년 2월 달에 권익위로부터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권고받아 가지고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셨어요. 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아니요,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정확히 잘 모르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정준호 위원 코레일 출신 임원들이나 임직원들이 관련 업체로 재취업을 했을 때 그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코레일하고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 코레일 출신 취업자 명단 보고받는 제도 알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22년부터 취업자……

○정준호 위원 22년부터 하고 계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재취업자 확인하는 기간이 2년 내에 취업한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맞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법조계에서는 전관예우 수임제한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좀 차이 있는 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개정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정준호 위원 그다음에 재취업자 현황을 명단을 보고받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알고 계십니까, 규정상?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코레일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명단을 받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서울 도시공사 모델을 제시하면서 도시공사는 입찰을 받았을 당시에 재취업자 명단을 받도록 돼 있으니 코레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는데 코레일에서는 입찰 시가 아니라 계약 시에만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입찰 다 끝나고 만약에 계약 시에 퇴직을 해 버리면 이게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것은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입찰할 때 예를 들면 재취업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안 된다든지 심사할 때 일부 기피제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계약 시가 아니고 입찰 시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준호 위원** 규정상으로는 입찰 시가 아니고 계약 시에만 명단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것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에게 권고한 대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입찰 시에 명단 받거나 제재 방안이 없으면 개정 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지금 몇 가지 벤치마킹할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 한반도의 중심, 철도 요충의 도시,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코레일 사장님, 얼마 전에 국산 고속철도 차량이 첫 번째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우즈베크이 발주한 2700억 규모의 고속차량 공급·유지보수 사업에서 현대 로템과 코레일이 민관 합동으로 수주했습니다. 국산화 착수 30년 만에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봅니다. 매우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K-고속철이 첫 수출이고 또 수입국에서 이제 수출국으로 변모를 하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더 수립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해외 진출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첫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년 가까이 기술력이 계속 발전을 해서 지금 해외의 다른 어떤 고속철도 못지않은, 그 이상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 기술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 수입국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 세 번째는 그동안 20여 년간 코레일이 계속 직원들의 해외철도 연수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싹을 틔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까지 민간기업과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제로 구축이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특히 세일즈 외교로 정상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요청하는 등 그런 부분이 또 지금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국토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그 안에 철도노선 고속화사업도 포함되어 있지요,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렇습니다.

○**임태영 위원** 또 최근 국토부장관이 모로코에 5조 원대 규모의 철도차량 수출을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는 등 K-철도 수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레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말씀드린 것과 같은 유지보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공유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요. 모로코 같은 경우도 지금 유지보수 기술 노하우라든지 교육훈련에 대해 같이 참여를 해서 꼭 수출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예,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원전 철도 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유지보수 운영에 풍부한 노하우가 있는 코레일이 K-고속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그런 전략과 비전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임태영 위원** 인국공 사장님.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임태영 위원** 최근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인천공항에 두 차례 떨어졌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임태영 위원**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로 조치했습니다.

○**임태영 위원** 풍선 내용물에 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들어가면 그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지만 쓰레기를 담는 것이라 해도 오물풍선이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면 또 큰 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무인기 드론 이제 오물풍선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사는 현재 드론에 대한 탐지 장비만 갖추고 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임태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현재까지는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드론에 대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축할 예정이고요. 또 경찰하고 같이 안정적으로 공항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는 이게 북한 소행으로, 무인기나 오물풍선 같은 것은 군사 공격의 일환이기 때문에 군에서 일차적인 어떤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사에서도 군부대를 상주시키든지 해서 뭔가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될 것으로 봐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과 협의해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태영 위원** 하여튼 공항에 대한 부분은 또 수도권이다 보니까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드론에 대한 탐지 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무인기나 오물풍선에 대한 탐지 또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공항 내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군에서 탐지 확인 무력화하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습니다.

○**엄태영 위원** 그런데 항공시설법을 올해 초 개정해서 드론 등의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엄태영 위원** 그런데 군이 만약에 상주하게 될 경우에 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간인 소유의 드론 진압에 발생한 이런 부분은 현행법상 감경·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항공시설법을 개정해서 군 당국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하여튼 간에 인천공항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항공시설법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국감 때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조금 전에 엄태영 위원 질의하실 때 드론에 대한 것은 있지만 풍선에 대한 건 없다 그러는데 드론에 대한 것 가지고 풍선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오히려 속도도 더 늦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적발은 그것은 훨씬 더 늦게 천천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군하고 공동대응을 해 갖고 드론이 오는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감지를 하고 또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비행기가 이착륙하니까 미리 떨어뜨려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엄태영 위원하고 질의응답하셨듯이 잘 대비를 해 주시고.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권영세 위원** 다른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케이팝 아티스트, 이번에는 배우지요, 배우가 공항 출입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무리가 있었는데 이걸 오늘 조금 아까한 뉴스를 보니까 그 배우가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인가 들어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작년 국감 때 질의를 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권영세 위원** 질의를 했더니만 어쨌든 이학재 사장님께서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대비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나온 것을 보니까 다중밀집 상황 운영예비절차서(OCP)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개정하겠다는

것하고 다중밀집 대응훈련 실시가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훈련 결과 반영해서 대응체계 개선을 지속하겠다 했는데 24년도 대응훈련 실시는 하셨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때……

○권영세 위원 아니요, 운영예비절차서는 2년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내가 질문한 게 23년 10월인데 23년 2월에 개정한 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 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25년도에나 개정하게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챙겨 봐서 개정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응훈련 실시가 올해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했냐 이겁니다. 아직 24년이 다 안 갔으니깐, 그러면 아직 실시가 안 된 모양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가 그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관계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얼핏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공항경비대가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항경비대가 경찰하고 따로 이게 설치된 이상 공항 내에서 일정한 질서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사법권한이 아니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정확하게 공항경비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해 보시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다른 쪽의 협력을 받는 체제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국감 때도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더 논의하셔서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지난해에 말씀해 주신 우리 승무원 이동통로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권영세 위원 조금 이따가, 이것 제가 하나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미술품 수장고 조성을 추진 중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공항을 아트허브로 만든다는 큰 틀에서 계획이 있고 거기의 첫 단계로서 일단 수장고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미술 아트허브를 만드는 게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가 새로운 문화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내리고하고 상관없이 아트허브로서 조성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1단계로는 예술품의 수장, 그러니까 보관……

○권영세 위원 보관하는 거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보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데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전시라든지 갤러리도 하고 아트페어 행사도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전에 중간 기착지로서 공항에다가 수장고를 만든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공항에다 수장고를 했을 때 무슨 특

별한 이점이 있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제일 큰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하고 이동성이 가장 커다란 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권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류단지, 이것은 아트허브하고 상관없이 물류단지에 또 민간 미술품 수장고가 추진 중에 있단 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거기는 창고 임대를 해 갖고 수장고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협의 중인 단계이고요. 일단은 규모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세 위원 어쨌든 상호 보완적이 되면 됐지 서로 과잉이 되거나 충돌이 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게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입니다, 내 집 마련인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어떤 일정한 기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제도도 법령으로 마련돼 있는데, 2021년에 공급 부족 사태 문제 때문에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청약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국민들에게 사전청약을 하도록 했는데 최근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정해 준 법대로 사전청약을 실시했는데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불이익을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의원실에서 지난주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냈는데 관련 피해자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피해 사례를 호소하고 있어요. 사건 내용을 몇 개 소개를 좀 드리면 LH가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아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한 단지 중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이후에 본청약을 시행하지 않은 단지가 29개나 되고 특히 그중에 파주 운정3지구 등 5개 단지는 아예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런 세대수가 약 1510호나 이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달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돼서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한 피해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메일로 사례를 호소하고 있는데 호소한 사례를 한번 좀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례가 저렇게, 제 메일로 보내 온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례들이 이렇게 죽 나열돼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1을 읽어 드리면 ‘청약 당시에는 저희 부부가 임신 중이었고 신혼특공이

가능했습니다. 여러 곳을 도전하다가 사전청약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부둥켜안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나 2년이 지난 지금 신희특공은 물 건너갔고 이제 기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이런 절절한 사연들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LH 사장님, 민간의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을 한번 직접 만나거나 그분들 요구 사항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송구스럽게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제가 그분들 피해 사례를 접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피해자들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사전청약제도가 있어서 한 건데 이게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서 사업이 취소됐는데 이것 정부 행정방침대로 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구제대책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 두는 이런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국토부의 주택토지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잠깐 발언대로.

이렇게 보도가 된 내용처럼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단지의 경우에도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공공에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민간 사전청약은 그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약통장 효력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당첨자……

○**이연희 위원** 그것을 언제쯤에 시행할 생각이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지금 일단 저희 내부 방침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9월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연희 위원** 실장님, 국토부에서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사전청약을 했는데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개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LH 사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저는 LH가 사업이 취소된 민간사업장을 직접 인수해서 착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LH는 우선적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에 대해서 수요와 입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재매각을 한다든가 자체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수요가 충분하여 민간 건설사에 재매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민간에게 매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수요나 입지 등을 종합 검토해서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주택도시기금은 무슨 재원으로 조성이 되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주로 조성되는 재원은 청약예금하고 국민주택채권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지금 자산총액의 거의 대부분이 국민주택채권하고 청약저축예금이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즉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돈이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부채성 재원입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부채성인데 다 국민의 돈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가 이 주택도시기금을 유난히 많이 쓴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개선돼야 될 것 같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위원 그 기업이 어느 기업이라는 건 말을 안 해도 아마 사장님은 아실 텐데 제가 지금 그 회사 주택도시기금 사용내역을 받아 보고 싶은데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제가 어느 사업자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김도읍 위원 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사기업 상위 10위 기업과 주택도시기금 사용내역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지난 정권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이것을 달라고 하는데 목숨 걸고 제출하지 않았어요. 끝내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님.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김도읍 위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됩니다. 경남의 마산에서 부산을 관통해서 울산까지 1시간 생활권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반시설인데요.

여기에 지금 에코델타시티역 개통을 바라는 부산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국토부로부터 타당성 재검토 요청을 받은 게 3월인데 올 8월에야 용역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서 부산시민들로부터는 오히려 공단에서 의지가 없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지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당연히 저희들 시민을 위한 교통 편의라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최대한 서둘러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증기간 대폭 단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당초 예정되었던 28년 에코델타시티역 개통을 목표로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오실 필요는 없지만 다음 주까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김도읍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 노선이 몇 개고 구간의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무료 노선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노선에 연장이 몇 km 정도 됩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저희들이 총 36개 노선, 민자만 4276km를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김도읍 위원** 지금 23개 노선에 148km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그중의 76.8%, 즉 114km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뭐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대표적인 게 제1외곽순환도로……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무료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것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파악을 해 봤더니 IC를 설치하는 것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흥도 제1외곽선, 신천IC에서부터 김포까지……

○**김도읍 위원** 그러면 요즘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무정차 하이패스 있잖아요, 그것 다 설치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몇 번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사장으로서. 우리 회사 방침과는 좀 다르게, 그랬더니 그런 사유가 있어서 이제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해서 전면 재조정을 하자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IC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수도권은 무료화하고 저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땅이 좀 있으니까 IC 설치할 땅이 있으니까 유료화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78%가 넘는 비율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같은 시에서 같은 시로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극력 고집하고 계시고, 이게 맞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고집이 아니고요. 그건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관

리하는 구간이 지금 36개 노선에 4276km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활동할 때하고 실제 취임을 해서 가서 보니,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유료도로법이 있어서, 민간 구간까지 전체 5009km의 고속도로가 건설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채산제로 다시 말해서 5009km를 하나의 노선으로 보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는 비용 대비 이미 투자를 많이 회수했다 이런 말씀이 안 맞는 게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로 관영으로 전국의 노선을 하나로 보고 있어서, 단일 노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을 유료도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메꾸고 있고.

도로공사의 예산 처리 방침도 감가상각이지요, 원가 상각. 독특한 회계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게 지금 고속도로 건설비용 투자 대비 회수한 게 절반에도 굉장히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회계법도 저희들한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그것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게 왜 무료화되어 있는 도로 7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부산시에서 올려 가지고 부산시로 내리는 그 구간을 왜 지금까지도 유료화하느냐고요. 무료화해 줘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애당초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부산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가락톨게이트 유료 운영을 전제로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부산톨게이트를 이전한 거고 8차로로 확장을……

○**김도읍 위원** 부산시와 협의가 되었더라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운영 실태와 맞지 않고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부분하고도 맞지 않다 그러면 개선을 해 줘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외를 수도권에 있는 것을 적용시킨 게 아니고, 지금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김도읍 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 해결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제가 강구를 좀 하는데 아마 그게 기존에 무료화로 이때까지, 도로공사 내부 사정이 과거에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통행료 인상과 관련돼서 전면 개편을 좀 할까 합니다.

○**김도읍 위원** 전면 개편할 때 유료화돼 있는 것도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정체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기재부 벽을 넘으셔야 되는데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기재부 벽을 넘으셔야 된다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기재부 벽도 있지만 제1외곽순환도로 같은 것, 과거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통행료를 못 받고 영동고속도로, 서해안에서 올라오는 게 지금 부천 구간에는 아무 돈도 안 내고 부천으로 빠져 버리고 계양으로 빠져 버리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논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해결을 하는데 통행료 인상과, 2015년도에 4.7% 통행료 인상되고 지금 십여 년 동안 한 번도 통행료 인상이 안 됐거든요. 그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통행료 인상과 연관시켜서 지금 김도읍 위원 말씀하신 그런 것 포함해서 고속도로를 과거에 못 바꾸고 있었던 게 있으면 그것까지 전면 일거에 같이 해결하는 방법이……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방향이……

○김도읍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김도읍 위원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더 따지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가 적자 누적이 된다, 그래서 통행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도로공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한번 깊이 따져 봐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통행료 인상 문제까지 들고 나온다 그러면 도로공사 인적 구조조정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인적 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PSO 공익 비용을 보전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선투자 금액에 대해서,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천안-논산 대구-부산에 약 5조 원이 투자되는데 도로공사라는 이유 때문에 이것을 다 부담하라 그러면……

○위원장 맹성규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여기서 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수도권순환도로 무료로 다니는 것 요금 받으실 수 있겠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게 국민적……

○위원장 맹성규 그게 제 지역구입니다.

(웃음소리)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구조적으로 도로공사가 어떤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김도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 그다음에 거기를 넘어서서 기재부 재정 당국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의 기능, 전체적인 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장님 계실 때 해결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글썄요, 위원님들이……

○위원장 맹성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지적을 하시니까 저도 해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장님,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을 한발씩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어차피 국감 때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같은 말씀인데요. 도로공사 사장님 그리고 이우제 도로국장님도 같이 답

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C 추가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장님하고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을 때 지역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경우 그게 요구자, 원인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돼 있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그것을 찾아보니까 도로법 제52조에 근거해서 국토교통부 지침 그리고 어떤 근거에 있는지 모르지만 기획재정부의 지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도로법 52조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고속도로와 연결할 때는 그 도로관리청이, 서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할 때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별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과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의 지침에는 그 허가 기준뿐만 아니라 비용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그 비용 부담의 기준이 보면 좀 기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운영 중에 있는, 그러니까 개통된 지 5년이나 10년이 지난 운영 중에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IC를 갖다 붙이려면 요구자 또는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있을 때는 요구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지침에 돼 있는데 고속도로공사와 50 대 5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설계 중에 있을 때, 이것은 제가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보니까 기본설계 이후에 그때도 50 대 50입니다. 여기서 요구자가 누구냐,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도로국장님, 이 지침에서 말하는 IC 추가 설치의 요구자와 원인자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원인자는 지자체이거나 아니면 그 부근에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렇지요. 그 지역의 고속도로가 오래 운영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이 개발이 돼서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자체장이 이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지자체 지방비로 건설비를 다 대야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 내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서명을 해 가지고 도로공사 사장님께 요구하면 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제도는 바뀌야 된다. 도로라는 게 국가기반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IC를 내는 이유는 국도와 국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국도와 지방도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이 발전하면 다 국가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또 그 IC는 그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고속도로는 전체가 한 노선이잖아요. 전 국민이 다 이용하는데 이것을 원인자라 해서 요구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라 그러면 각 시군이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바뀌야 되고요.

그래서 기재부와 국토부에서 이건 형평에 맞게 반반 부담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IC를 하나 건설하는 데 정규 IC는 한 600억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이패스는 한 109억 드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요구자가 건설해 주고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도로공사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익도 분배해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민홍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규정을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거기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부담한 부분만 하고 지자체에서 부담한 것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50 대 50을 부담했으면 지자체에서 부담한 50%는 거기다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민홍철 위원 산정을 안 하더라도 전체 수입과 유지관리비도 지금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기는 하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우리가 낸 것만 부담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IC를 설정함으로써 이용료가 높아지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도로공사가 수익을 보잖아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적자 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홍철 위원 적자는 재정으로 부담을 해 줘야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러니까 적자……

○민홍철 위원 그 IC 때문에 적자가 날 수 있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 IC를 그냥 저희들이 요구만……

○민홍철 위원 아니, 함진규 사장님도 지난 19대 국토위 때 지역구에 역사 설치 문제 왜 지자체가 부담하느냐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기억이 나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건 제가 의원 때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웃음소리)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입장이 바뀌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지금은 제가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홍철 위원 이것은 제도를 바꾸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도로국장님, 어때요? 이게 형평성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맞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위원님, 이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형평성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홍철 위원** 기존에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문제는 IC 설치나 연결시설 설치 문제는 총 사업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총 사업비 얘기를 하시던데 총 사업비는 건설 중에 있는 도로라든지 계획 중에 있는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지 운영 중에 있는 고속도로가 무슨 총 사업비가, 법인에서 그 설치를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위원님,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지역에서 가급적 많은 IC를 나들목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나들목을 다 만들면 사실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비용편익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나들목 간의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민홍철 위원** 아니, 그것은 조건이 있잖아요. 심사해서 설치를 하는데 비용의 문제를 왜 전액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소유권은 국가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위원님, 그래서 방금……

○**민홍철 위원** 그래서 그 제도는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 50 대 50을 가든지 비용 분담을 적절하게 형평에 맞게 해야지 왜 전액을 요구하는 지자체한테 맡기느냐 이겁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하이패스는 지금 현재도 50 대 50으로 각자 부담을 하고요. 물론 B/C나 AHP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정규만 원인자 내지는 요구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이런 요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민홍철 위원**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몇 군데 안 되는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 무척 많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걸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은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민홍철 위원** 도로국장님?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정이 있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대 흐름에 순발력, 적응성이 좀 낮다. 아마 도로공사도 그렇고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대안을 좀 제시하셔야 될 겁니다. 국정감사 때 준비를 좀 하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황운하 위원님 질의를 마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안태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십시오.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을의 안태준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방금 함진규 사장님의 말씀에 조금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지금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들이 멍모르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안태준 위원** 어쨌거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고 그러면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할 때는 여러분과 같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욕이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의정활동을 기울였는데 제가 공기업 사장에 취임을 해서 제반 규정을 전부 다 숙지를 하고 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의원 때 생각했던 것과고는 다른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 의정활동하고 여기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세부 내용을 보니까 지금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또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린 겁니다.

○**안태준 위원** 선배 의원님으로서 활동하셨던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낯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운하 위원** HUG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황운하 위원** 디딤돌대출 아시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황운하 위원** 디딤돌대출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춘 피해자 전용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디딤돌대출이 일반 대출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 특화된 그런 조건으로 하는 대출도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상품 중에 가장 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맞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구입자금대출 조건은 금리라든가 대출 한도에서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전용 상품으로 출시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는 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상품이다, 디딤돌대출이. 맞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신혼부부보다 금리는 좀 싸게 해 드리고 소득요건은 신혼부부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 당시 이게 2023년 4월인데 이때는 상황이 좀 시급하니까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을 기준으로 삼은 걸 이해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HUG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이걸 주관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도 다양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것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대출 업무 시행세칙·규칙 HUG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국토부 승인을……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황운하 위원** 국토부에 이런 걸 제안하거나 협의한 적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가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상품 하고 싶은데 어쩌냐, 이런 것 얘기한 적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전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디딤돌대출이라든가 버팀목대출……

○**황운하 위원** PT 다음 쪽으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 답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랬어요. 한 번도 국토부에 건의한 적도 없고 제안한 적이 없다. 너무 소극적으로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그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피해 규모 다양하고 해서 기존 상품 중에 최우대조건 하나, 신혼부부한테 적용되는 그 기준 하나 그것을 마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용 상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고 나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HUG에서 좀 더 좋은 상품, 금리상품을, 금융지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좋은 상품 개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부동산원장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그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황운하 위원**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실거래가 또 거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용률이 낮은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민간 쪽은 특히 거의 0%더라고요. 그렇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황운하 위원** 이용률은 안 올라가는데 예산은 거의 다 전액 집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산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황운하 위원** 그리고 전자계약시스템이 무엇보다도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아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고

또 전세사기 방지 방안도 될 수 있는데 이런 건 또 어떤 생각이신지, 그다음에 이걸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전자계약시스템 이 부분이 부동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세사기 방지도 도움이 분명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존에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황운하 위원** 그래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이걸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줘서 공인중개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이에 대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했다가 5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 대구 달서병 권영진 위원입니다.

기관장님들 모두 다 수고 많으십니다.

코레일 사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전국에 코레일 KTX 역사가 몇 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전체 역은 690개로 알고 있는데 KTX만 꼭 집어서는 제가.....

○**권영진 위원** KTX 역사는 69개라고 그러네요.

이 69개의 역사 중에, 아까 도로공사 사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질의할 때도 나왔는데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해서 코레일에 기부채납한 역사가 몇 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완전히 기부채납받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영진 위원** 완전히 한 것은 대구에 있는 서대구 역사 하나 아닙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대구시장 할 때 1081억을 들여 가지고 대구시가 지어서 코레일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민들의 절박한, 대구 산업의 80%가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고 대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대구역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로서는 108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KTX 역사를 짓고 그래서 코레일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레일 입장에서는 지금 KTX는 주중에 27편 주말에 30편, SRT는 주중에 10편 해서, 사실상 보면 SRT는 5편 서는 거고 그리고 KTX는 12편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폭우 왔을 때는 6시 40분 차를 타고 이 상임위에 오기 위해서 나갔는데 5분 전에 서대구역에서는 정차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상임위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동대구역에까지 가서 거기서 아무 열차나 잡아탔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지금 서대구역에 증편 계획은 없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현재는 없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증편할 정도로 승객 숫자가 증가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금 꾸준히 늘고는 있는데요.

○권영진 위원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 늘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23년에 3427명이 일평균 이용을 하셨었고요. 24년이 돼서 3744명이니까 한 10% 정도 지금 전년 대비 금년 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이게 2021년도 개통할 때 월평균, 코레일 자료예요. 10만 9068명이 이용했는데 지금 올해 5월 달에, 평균해서 13만 7091명으로 29%가 늘었어요, 지금 개통 때보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차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대구역을 이용 안 하고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시간 안 맞으니까 동대구역에 정차하는 데 가서 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증차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구시가 대구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1000억 이상을 들여서 역사를 지어서 코레일에 기부채납을 했으면 대구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편하고 차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에는 동감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다만 앞에도 가끔씩 나오지만 평택에서 오송까지 선로 용량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열차 증편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서대구역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열차, 이것을 많이 늘리게 되면 한 8분 정도 소요가 좀 더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8분 때문에 전체적인 열차 스케줄과 반복 사용 이런 것에 의한 비효율이 발생을 해서 그렇고요. 나중에 평택-오송……

○권영진 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평택-오송은 지금 27년 말까지 그 계획이……

○권영진 위원 그러면 28년 정도 가면 증편할 수 있다 이건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때쯤 되면 열차 편수도 좀 많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슬롯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호남 쪽의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이나 정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 되면 숨통이 좀 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때까지는 참아라 이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고민은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권영진 위원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이게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없는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리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문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입주 예정 물량을 보면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90% 수준의 공급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심지어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27만 호인데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문진석 위원 사정이 이런데도 국토부에서는 매일같이 ‘공급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 ‘집값 상승이 제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측과 전면 배치되는 얘기가 장관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원장님 국토부 집값 상승에 대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진석 위원 답을 못 합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문진석 위원 부동산원 통계가 틀리지는 않겠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런데 입주 물량 통계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성 면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진석 위원 부동산원 통계가 유일한 통계 아니에요, 입주 물량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곳은?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주택공급통계시스템을 통해서 30세대 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나온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돼 가고요, 국토부랑 그 통계를 바꾸는 걸……

○문진석 위원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공급 물량이 훨씬 더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것도 2022년에 비하면 2023년에 물량이 70% 정도 줄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가격이……

○문진석 위원 서울 전세가격도 60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격도 16주 연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심지어 7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계가 틀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립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틀리지는 않습니다.

○**문진석 위원** 국토부장관도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물량이 아파트로 옮겨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는데 국토부 해명처럼 아파트 공급이 충분했다면 그 효과가 제한적일 테니까 60주 연속 전세가가 오르거나 매매가가 16주 연속 상승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공급이라는 게 지금 당장의 공급도 있지만 앞으로 수요에 따라서……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공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라든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 로직이잖아요.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국토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하다고만 얘기하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랑 이런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저희들이 숫자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수도권 서울……

○**문진석 위원** 어쨌든 숫자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공급 물량이 줄었지요, 과거에 비해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게 공급 물량이라고 하는 게……

○**문진석 위원** 입주 물량이겠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인허가·착공·준공·입주 물량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정하는 게 다르겠지만 어쨌든 입주 물량이 준 건 사실이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서울만 두고 보면……

○**문진석 위원** 서울만 보면 조금 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더 늘어나고요. 내년까지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물량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이게 부동산원의 통계와 우리 국토부 얘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빌라 같은 것도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빌라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거든요. 그런데 빌라 신축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국토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빌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어……

○**문진석 위원** 한 70% 정도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책이 세워져야 될 텐데, 물론 전세사기 피해 여파로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빌라의 공급 대책도 발표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전혀 손놓고, 5월 달에 한다고 해 놓고 지금 7월 중순 돼 가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국토부

입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지금 저희 국토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 서울 지역,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매·전세가가 계속 상승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 전문가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진단이 중요해야 사실 효과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을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진행하고 하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진석 위원 아니, 그런데 시장의 전문가라든가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가면 집값이 엄청나게 폭등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문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공급 물량이 충분하니 집값 상승은 제한적이고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접촉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도 약간 좀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추세적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 전문가들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사실 이것은 유효수요 같은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현재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번 매매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굉장히 강하게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해서 계속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의견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의견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늘 28개 기관에서 참여하셨는데 8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질의나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나머지 기관장님들 중에 혹시 발언하고 싶은 기관 계세요?

나중에 또 가서 가지고…… 아니,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3분입니다. 다만 주질의에서 추가로 질의를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시간을 제하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질의 시간 관련해서는 차후에 간사님들 간에 재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의부터는 이것은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요.

오늘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충질의시간은 3분을 다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대전 중구 박용갑입니다.

한문희 이사장님, 아마 코레일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코레일 증편 문제 때문에 이춘석 위원님 또 정준호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서대전역 코레일 증편 문제 때문에 대전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 분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문제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여기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업무보고가 있어요. 속도감 있게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또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또한 철도건설 기술과 시설 이런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단지의 상부 부지 활용을 이용해서 이 사업성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철도지하화 특별법의 기본 원칙이 상부 개발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지하 대체 철도를 놓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 같으면 모르지만 과연 지방의 상부 부지를 활용해서 이 막대한 공사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지혜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현실성 있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하고 또 우리 철도공단이 또 관계기관과 함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지혜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신청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방과 수도권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복기왕입니다.

우선 부동산원 원장님 좀 나와 주시고요.

나오는 시간에, LH의 사업보고를 죽 들어 보니까 관심 갖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서울과 대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도심공공복합사업이라고 있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있습니다.

○북기왕 위원 그런데 왜 그 단어가 한 단어도 보이지 않지요? 안 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빠진 것 같은데 도심복합사업은 아시다시피……

○북기왕 위원 하실 거지요? 분명히 하실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북기왕 위원 지정된 곳들 서두르고, 하실 거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북기왕 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서울시민들은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사업 승인이 서울에는 네 군데 정도 났는데 나머지 부산 인천 광주 이런 데는 하나도 안 나서 이 또한 서울·지방 차별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 문제 전임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사장님 책임 있게 진행시켜 주셔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알겠습니다.

○북기왕 위원 부동산원장님, 우선 좀 가벼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운하 위원님께서 전자계약시스템 이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바우처 예산편성이 돼 있고, 21년 22년은 12월 달까지 사업이 즉 진행됐었는데 23년은 6월 달에 소진되고 올해는 벌써 2월 달에 소진이 다 됐어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그렇습니다.

○북기왕 위원 예산편성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북기왕 위원 긍정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왜, 부동산원에서 예산 달라고 그러면 안 쥐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기존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북기왕 위원 겨우 2000만 원 돼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기왕 위원 겨우 2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북기왕 위원 정부가 통계를 누락했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저는 불편한 이야기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국토부의 주택통계 조작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도덕적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의 도덕적 사과입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제가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로 인해 서……

○북기왕 위원 보세요. ‘도덕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고 그것은 속기록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이런 문제가 공기업에서 있었던 걸로 감사원 감사도 나왔고 수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는 것입니다.

○**복기왕 위원** 부동산원에서 조작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걸로 봅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작됐다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런 이유가 보니까 KB하고 부동산원하고 또 부동산114하고 각각 통계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부동산원이 유독 좀 낮게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택가격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했다고 부동산원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을 조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당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국민들에게 설득하셔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월성원전 관련해서 공무원들 구속도 됐었어요. 그런데 다 무죄 났습니다. 아시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복기왕 위원** 마찬가지로 이 건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감사원에서 한 열 달 동안 감사하고 해서 고발해서 진행된 것인데 이 부분도 똑같은 경우가 나올 거 다라고 생각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여기에서 원장님께서 ‘도덕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써서는 안 되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예, 제가 ‘도덕적’이라는 표현은 안 쓴 걸로 기억합니다.

○**복기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재 위원**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HUG 사장님, 악성 임대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최근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악성 임대인 성명 나이 주소 그리고 채무액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셨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김정재 위원** 지금 보면 HUG 누리집이라든지 아니면 국토부 홈페이지라든지 안심전세 앱에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가 지금 수만 명이고 가해자가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이 가해자 중에 지금 악성 임대인이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일단 공개가 되면 안심전세 앱이나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체결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김정재 위원** 이 사람들, 악성 임대인이 누군지 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처벌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HUG에서 최근에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또 형사고발·고소한 사람이 지금 현재, 7월 16일

어제 기준입니다. 208명 중에 6.3%밖에 안 됩니다. 지금 42명만 경찰 수사 의뢰나 형사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이고요. 그다음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단 4명 0.6%에 불과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악성 임대인의 반 정도가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자격을 다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가 됐는데도 그대로 자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등록이 말소가 안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세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감면받고 있고요 또 양도소득세 감면받고 있고 모든 세제 혜택 다 받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슴을 정말 뜯어 가며 울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예요. 그런데 아무런, 악성 임대인들 이름만 공개되고 개인 신상이 공개된다 한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게 ‘하야야 한다’고 당위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것도 지자체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말소할 때까지 시차,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 또 한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이런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저희들이 지자체에 명단을 빨리 송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그래서 저는 좀 더, 명백한 입법공백입니다. 그래서 악성 임대인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은 바로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되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는 이런 규정들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보고도 해 주시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실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손명수입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님, 수인분당선 혹시 아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청량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까지 가는 굉장히 긴 광역철도 노선인데 요 강남을 거쳐서 분당을 거쳐서 용인을 살짝 거칩니다. 그랬다가 다시 수원으로 빠져요.

그것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도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노란선이 수인분당선이거든요. 기흥에서 수원 쪽으로 꺾어져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흥 남쪽이 철도, 원래 기흥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처인 쪽은 아예 거의 없고 기흥 북쪽만 수인분당선 하나가 조금 지나가고 밑에는 아예 철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 혜택을 거의 받지는 못하는데 혹시 신갈IC에서 꺾어서 동탄 쪽으로 내려가는 23번 국지도가 있는데 자동차로 가 보신 적 있으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 지역이 제가 자주 다니는 데이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손명수 위원 거기 민속촌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상습 정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철도가 필요하겠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보통 길이 엄청 막히는 그런 구간에 철도를 놓잖아요. 정체가 없는 게 철도의 특성이니까.

지금 그래서 기흥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까지 내려가는 분당선 연장 사업이 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냥 지나가는 지역만 해도 150만 정도의 수혜 지역이고요.

저게 사실은 말도 많은 용인 도시철도가 기흥역까지 돼 있는데 저게 기흥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되면 용인 도시철도가 에버랜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 지역 사는 사람들까지도 동탄으로 가는, 그래서 SRT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철도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연장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래서 언뜻 보셔도 해야 될 사업 같지 않습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이 워낙 교통량이 많고 거주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사업성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새로 발표되는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이 사업이 경제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사업이 안 된다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오늘 업무보고 크게 네 가지 발표하신 것 중에서도 두 가지가 디지털 기반 관련한 주 사업을 말씀하시고 상당한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아주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맞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경로로 원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둔 게 있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금 우리 전산센터 같은 경우만 놓고 보면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전산센터에 이런 전산 시스템이 다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인 발권이나 조회, 발매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7월 6일 날 화재 있었잖아요, 서울본부에서.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화재 진압하는 데는 얼마 걸렸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주 진화를 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걸렸고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역에서 발매되는 데,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전체 정상화되는 데는 전체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30분짜리 불을 물리적으로는 끈다 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차질은 12시간 이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역에서만 그렇습니다.

○김희정 위원 역에서요. 어쨌든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원화하셔야 됩니다, 전산망의 이원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이중화하고 이원화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시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김희정 위원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에 똑같은 2개의 시스템 두는 것은 이중화고요 다른 공간에 뒤편이 이원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기관 중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이원화 굉장히 잘해 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공항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깨닫고 올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똑같이 과거에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안 된 이유가 뭘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적을 받고 추진을 하다가 토지 구입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김희정 위원 시간이 조금이 아니라 8년 걸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금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지체가 됐습니다. 빨리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이런 30분짜리 화재 사고에도 이렇게 12시간 역에서 발매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두 가지가, 크게 디지털 얘기를 했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산망 이원화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전산 이원화 계획이요 올 9월에 아산에 착공을 해서 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8년 늦었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전의 백업센터 운영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대전에 있는 백업센터가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기능에 집중이 돼 있어서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희정 위원**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요 전산망을 내부 전산망만 가동하고 있고 외부 전산 연결을 안 해 뒀습니다. 이번에 그 사업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용 문제가 저희들이 지금 추산컨대 한 150억에서 200억 사이 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원화하는 사업과 이게 혹시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고도화’라는 제목을 걸고 왔으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이렇게 새 사업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합니다. 검토하시고 구체적인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주종완 도로국장님, 도로국장님 나와 계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이우제 도로국장입니다.

○**윤종오 위원** 울산 북구에서 경주 외동까지 산업 물동량이 많아 가지고 7호 국도가 혼잡 겪고 있는 것 아시지요? 잘 모르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오셔 가지고 도로 확장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쪽의 상황을 잘 모르네요. 그렇지요?

그쪽에 지금 기존 사업하고 있는 곳 중에서 외동에 있는 문산교차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6km 정도 되는데 1구간이라도 빨리 개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이 논두렁으로 막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곽순환도로하고 농소-강동 간 도심혼잡도로 사업하고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혼잡도로 사업은 10월 달에 착공 예정인데, 연계돼 있는 도로인데 외곽순환도로는 아직까지 총 사업비가 확정 안 됐어요. 그 부분 좀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함진규 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19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고용하면서 현장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해서 임금을 삭감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애초에 진행됐던 것이 한 596명 되는데 2024년 3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된 대로 지급하라고.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소송 진행됐던 게 23년도 4월 달에 한 400여 명 또 2024년도 1월 달에 한 300명이, 1심에서 다 패소하셨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그러면 대법원 확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또 항소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이미 대법원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항소하고 있는 것 이길 자신 있어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윤종오 위원 이길 수 있냐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 제가 그것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윤종오 위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원고들이 다 승소를 했는데 후속조치인 이행의 소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지금 패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그래서 임금과 관련돼서 일단 있고. 지고 나면 연 12%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그동안 소송과 관련돼서 들었던 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났다 그러면 임금과 관련해서는 1심을 패소했고 2심을 또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 당사자지위확인소송에서는 원고들이 승소를 했고 후속조치인 확인의 소에서, 임금채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패소를 해서 지금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종오 위원 이것 또 대법원까지 가져갈 겁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 저희들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소송을 중단시키고 이러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게 배임죄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종오 위원** 아니, 임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난 건데……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아니지요. 지금 전부 파기환송돼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전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경기 광주시을 안태준입니다.

먼저 LH 사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8 한번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5월 것은 5월 것까지니까 좀 그렇다 치더라도, 눈에 보이게 제가 그래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전체 물량이 파란색이고 노란색이 민간 그다음에 공공 물량이 분홍색이고 LH는 회색인데요. LH의 역할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LH에서 이번에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민간이 위축돼 있을 때 공공이 훨씬 더 많이 나서 줘야 한다는 그런 부탁 말씀 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안태준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원 원장님 잠깐만.

제가 요즘 지속적으로 임대차 2법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지난해 장관께도 제가 한번 물은 적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만기에 따른 임대료 4년치 상승분이 선반영되면서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다음에 ‘임대차 2법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계약 갱신 건수가 줄어드는 등 실효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7월 9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수도권 전셋값 급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또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폐지 주장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한다 이러면서.

참고1 표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지수에 따른 계약 갱신 및 신규 계약 이건데 지금 2021년부터 보면 아파트값이 조금씩 계속, 그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그 후부터는 아파트값이 내림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셋값도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노란선을 보면 신규 전월세 가격 그다음에 전월세 계약, 회색은 전세 계약 갱신 저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기 딱 크로스되는 접점을 보면 오르고 내릴 때가 저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부동산값이 오르고 있을 때 작동하는 것이 임대차 2법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내릴 때는 당연히 갱신이 없지요. 신규 계약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다음 것 한번 봐 보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의 게 아파트값이고요 아래 게 전셋값인데 전셋값이 자기 마음대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값에 연동이 되는 거고. 그러면 주택값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에 기인을 하는 것이지 임대차 2법에 기인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 표를 보면 이게 국토연구원 설문조사입니다. 보면 폐지하자는 주장은 없어요. 다만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율을 좀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갱신 기간에 대해서도 갱신 기간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부동산의 통계를 다루시는 분이시고 주택실장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런데 부동산 2법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건 정책 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부동산원이 제공한 통계를 제가 아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근거로 보면 주택값하고 전셋값이 연동을 하는 것이지 임대차 2법이 올라갈 때, 향후에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유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법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손태락** 그 부분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임대차 2법이 시행되고 나서 초기에 전세가격이 좀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4년 지나고 나서 다시 갱신할 때 또 올라갈 것이지 않느냐 우려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전세가격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갱신청구권이 올라가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은 저희들은 정책 지원하는 입장이고 정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LH 사장님, LH에서 택지 조성해서 주택단지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주택 공급만 하면 끝입니까, 여기서?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것은 주택만 아파트만 만들어서 공급하면 그걸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생활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야 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주택 공급하고 예를 들면 지구의 연결도로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입주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불편도 드리고……

○**서범수 위원** 입주자들은 지금 사기 분양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서사 다운2지구에 2025년 8월 내지는 2026년 말에 입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결도로가 2031년도에 완성이 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차가 막히는데 5년간을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섬을 만들어 버려요, 섬을. 그러면 과연 입주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분양한 걸 다시 취소해 달라, LH에서는 안 된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사실……

○**서범수 위원** LH는 지금 전혀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늦게 해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사실 금전적인 손해는 없지만 LH가 유무형으로 그런 걸로 인해서 국민적……

○**서범수 위원** LH 신뢰야 워낙 바닥에 떨어진 거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LH에는 광역교통이나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운2와 관련된 지구의 연결도로 문제도 사실은 저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서범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주택토지실장님 계시지요? 나와 보시지요.

이게 지금 LH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다. LH 이야기입니까? 국토부에서 이것 책임지고 좀 조정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지구의 연결도로 같은 건 지방자치단체하고도 연결이 되고 국토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모여서, 주택 공급이 되면 그에 관련되는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생활 기반시설이 같이 가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국토부에서? 그냥 수수방관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저희 국토부에서도 이게……

○**서범수 위원** 그래서 LH 쪽하고 국토부에서 이와 관련되는 비슷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전수조사 한번 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서범수 위원** 입주자하고 기반시설이 안 맞는 지역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은 LH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님, 현재 국내 자동차에 설치된 EDR,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Event Data Recorder)라고 하는데요. 사고기록장치 알고 계시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장 시간 얼마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저장 시간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사고 직전 5초간 기록되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 거라 현재 급발진에 대한 사고 규명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데이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연방규정집 EDR 규정 사고 20초 전부터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초 기록은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에는 부족하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최소 충돌 20초 전 데이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그런 게 기록 시간도 필요할 거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EDR의 기록 항목이 지금 약간 제한돼 있습니다. 기록 항목이든지 기록 조건 같은 그런 것 좀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염태영 위원 급발진에 대한 우리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꼭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ACPE라고 그러니까. 알고 계시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도입해서 현재 93% 차량에 장착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모든 차량에 장착이 의무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국제 평가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이를 의무화할 생각 없으신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스탠더드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게 좀 마련되면 저희들도 바로 도입하는 것도 하는데 다만 그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인센티브 같은 것 그런 쪽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 바로 국제적 기구의 표준, 기준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빨리 따라서 시행을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는 일을 공공기관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급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예, 발 빠르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님.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이성해입니다.

○염태영 위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개통식이 언제입니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지금 계획으로는 2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원래는 당초에 2024년 개통하는 걸로 고시됐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그게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런데 관계기관에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변경된다는 통보도 없이 홈페이지에 그냥 ‘2026년’ 이렇게 통보되면 되는 건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당시에 여러 가지……

○염태영 위원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히 정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고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염태영 위원 그리고 수인선 지하화 사업비 반환소송 알고 계신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하화 사업비가 결국 처음에 없던 토지보상비를 넣어서 이런 일에 대해서 500억 가까이 시에 다시 부담을 주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소송이 5년째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염태영 위원 벌써 개통은 4년 전에 됐는데 언제쯤 정산이 완료돼서 이 소송,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마무리지을 수 있을까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소송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된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서……

○염태영 위원 시로 보면 500억이 엄청 큰돈인데 이를 부담하고도 이에 대한 소송을 5년째 하고 있다는 건 시로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하루빨리 시급히 이 공사비 내역을 빨리 제출해서 소송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철도공단이사장 이성해 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다음번 국감 때까지 꼭 이 매듭이 지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오늘 주질의시간이 좀 짧았어서 연결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LH 사장님께 아까 ‘사전청약 단지들 몇 개월씩 몇 년씩 지연되는 것 어떻게 손실과 피해 보상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미 보상 계획이 있다. 계약금을 원래는 10% 내는데 5%만 초기에 내는 걸로 낮춰 주고 중도금도 두 번 내는 것을 한 번만 내고 나머지는 잔금 때 내도록 납부 조건을 조정해 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게 감면해 준다는 게 아니라 납부 시점만 미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이소영 위원 이것 지연통보서에 적혀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게 합당한 보상책이 맞나요? 이게 가치 상당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지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저희 지역의 과천 주암지구, 의왕 월암지구, 의왕 청계2지구 다 1년, 1년 반씩 본청약 늦어지는 단지인데 주암지구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대충 해 봤습니다.

추정 분양가 6억 원, 그것 기준으로 계약할 때 내는 5%를 잔금 때까지 미뤄 준다는 거예요. 6억 원의 5%면 얼마지요? 3000만 원이지요. 계약금 납부는 원래 본청약 시점, 잔금 납부는 입주 시점, 이게 원래 계획상 2년 8개월 차이 나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 연 1.3%, 그러면 계약금 5%를 잔금 때 내게 미뤄 주는 것은 3000만 원의 연 1.3%, 2년 8개월 치의 이자 계산하면 105만 원의 이자 혜택이에요, 사장님.

중도금 절반은 잔금 때로 미뤄 준다? 중도금은 통상 60%, 그것의 절반을 1년 정도 미뤄 준다는 거지요? 이자 1.3%, 계산하면 230만 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금, 중도금을 잔금 납부 시기로 조정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합쳐 봤자 3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가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연의 대가로 오르는 분양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2021년 사전청약 시점 이후에 지금 건축비가 이미 19% 상승한 상황이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5%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연 5%씩 상승하는데 1년 넘는 자연이다? 그러면 분양가 상승 효과만 해도 기본 수천만 원인 거예요, 사장님. 이것을 330만 원으로 손실보상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신혼부부들이 너무 화가 나고요.

아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 명확히 드렸는데 답변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최소화해서 본청약 분양가가 정해져야 합니다, 원가 상승분이 당첨자들에게 전가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품질 업그레이드든 이자 추가 감면이든 추가 보상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입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는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제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 주택실장님, 제도 보완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LH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LH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청주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이정기 사장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지요.

초미니 국제공항이긴 하지만 개항 이후에 이용객이 10배 성장한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청주공항인데요.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항공 실적이 최고조였던 시기를 말할 때 코로나 직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맞습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맞습니다.

○이연희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제공항 중 운항 편수 연 2000편 이하를 제외한 공항인데요. 정기·부정기 여객기·화물기를 포함해서 2019년 기준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운항 실적을 쭉 보면 거기에 청주공항의 이용 실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공항이 코로나19의 충격을 겨우 극복하고 있는 데 반해서 청주국제공항은 2022년 코로나19 충격을 조기에 졸업하고 23년 12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1/4분기 19년 기준 40%의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PPT 2번을 보여 주시지요.

여객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약 476만 명의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19년 대비해서 158%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주국제공항은 행정수도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중부권의 주요 거점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PPT를 하나 더 보여 주시지요.

청주공항 주변의 교통 인프라들을 이렇게 지도로 그려 봤는데, 천안-청주공항 전철 복선화 이 작업도 29년이면 개통이 될 예정이고 충북선 그리고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CTX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들이 대부분 5년에서 10년 이내에 개통되거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늘리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청주공항에 이렇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이연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주공항이 군공항하고 같이하면서 활주로를 1개만 쓰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민간 활주로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그런데 활주로의 문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저희 공항공사에서는 국제선……

○이연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사용하세요.

○이연희 위원 항공정책실장님 계신가요?

지금 국토부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위원님, 용역이 6월 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연희 위원 아, 그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객터미널 확충 또 주차 빌딩 건설 또 주기장 확충 이런 서비스 확충 방안들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연희 위원 지금 거기에 민간 활주로 신설 방안은 들어 있지 않나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용역 결과에서는 활주로 신설 부분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이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최근에 청주공항 이용 수요라든지 또 현재 활주로 이용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있지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활주로 이용률이 한 34%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작년 항공 수요라든지 현재 시설 여건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러면 그 용역 결과하고요 그런 부분, 7차 종합계획안들을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코레일유통의 김영태 대표님, 성심당을 유통에서 하시지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예.

○전용기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심당 사건 그 이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성심당 문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갈등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용역과 감사원……

○전용기 위원 그걸 또 용역까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서 풀 텐데요. 성심당 문제 하나만 보면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한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으면 되는데……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통에서 이런 결정을 했던 이유는 형평성을 이유로, 매출이 높으니까 원래 1억 받던 것 4억 4000만 원 가까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반발해서 나가고 지금은 3억까지 떨어진 것 아닙니까.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매출 높다고 이렇게 갑자기 한 4배 정도 임대료 올리면 매출이 떨어지면 그러면 깎아 줄 겁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매출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깎이는데……

○전용기 위원 또 깎아 주는 거예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받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전용기 위원 저는 왜 이렇게 이게 탁상행정처럼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심당이 나갑니다. 그러면 매출이 낮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그러면 매출액 비율에 따라서 낮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성심당은 4억을 내야 되는데 다른 업체는 낮게 들어올 수 있더라는 거네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매출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전용기 위원 이게 굉장히 불공정한 거지요. 성심당은 돈 많이 내야 되고 다른 데는 돈 적게 내도 되고, 이런 악덕 업주가 어디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지금 매출연동수수료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생각들이 다르신데요, 이건 보편적으로 유통업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전용기 위원 유통업계에서 그렇게 하나요? 사실 저는 자영업을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가……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월세 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전세 안 받고 월세 받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임대료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공정의 시초 아니겠습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용기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불공정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면 성심당은 4억 이상 내야 되는데 판 업체는 더 낮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불공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즉 그 공간이 갖고 있는 공간력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가를 내는, 성과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은 소위 공정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억 정도 수준의 수수료가 한꺼번에 4억으로 오른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냐 이겁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존중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구잡이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단순히 수익 추구를 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상생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성심당 당신들 돈 많이 버니까 돈 더 내세요’, 한 4배 가까이 갑자기 올려 버리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 낮은 다른 업체 들어오면 ‘당신들은 깎아 줄게요’ 이게 불공정이지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깎아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 생각과 달라서요.

○전용기 위원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대표님!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예.

○위원장 맹성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용기 위원 정확한 기준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똑바로 설명하세요. 지금 태도도 그렇고 건들건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제가 그렇게 답변 태도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그랬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대표님!

지금 대전역사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철도국장?

아니 코레일 사장님, 대전역사 소유자가 누구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대전역사는 출자가 아직 안 돼서요 소유는 국가로 돼 있고요. 저희가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왜 코레일유통에서 저렇게 좌지우지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내영업에 대한 권한을 유통으로 주다 보니까 유통이 임대료 받고 계약을 하는 당사자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철도국장님!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코레일유통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말씀해 보세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된 거냐면요 구내영업료에 의해서 모든 업종 모든 점포에 대해서 최저매출액 대비 17%를 임대료로 받도록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심당은 그동안 5%를 기준으로 내고 있어서, 성심당만, 다른 곳들은 다 매출의 17%를 임대료로 내고 있었고.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던 게 다른 업체들은 다 17%가 최저인데 왜 성심당만 5%냐,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심당도 17%로 최저를 내라 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성심당이 4배 넘는 액수를 내게 됐는데……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그러면 왜 성심당은 그동안에 5%로 묶어 뒀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그때 5%가 됐던 건 처음에 성심당은 구내영업료 방식이, 매출액 대비 몇 % 개념이 아니었고 그냥 ‘연간 임대료 얼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감사원에서 다른 데처럼 매출액 대비 영업료 방식으로 바꾸라는 지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액수나 이런 게 너무나 크다 보니 그때는 감사원과 갑자기 민간업체에 많이 받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일단 5%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형평이라는 문제를, 17%를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형평을 들이대니까 성심당은 뭔가 특혜를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그러면 코레일이, 성심당이 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성심당만큼 매출액을 올려서 그 임대료를 낼 만한 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정 수준에서 17% 미만으로 받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레일 또는 유통과 성심당이 상생하는 길이긴 한데 이게 특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얹혀 있다 보니까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유통 대표님.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래요 뭐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배경을 봐도 5%로 설정이 돼 있고 그게 17%로 가다 보니 갑자기 4배 정도가 올라간 거고,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4배 정도가 올라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해 가지고 규정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대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그러면 그것을 들이밀어 가지고 나는 규정대로 했는데 나중에……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드릴 테니까 답을 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억 보다 안 나올 때는 유통 대표가 책임집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17%보다 하향 조정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제기가 여기로 가도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 그렇지요? 기존의 것으로 가도 감사원 감사도 있고 하니까 이게 명쾌하게 답이 안 나오고.

저는 좀 답답한 게 이게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국토부가 됐든 코레일이 됐든 유통이 됐든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합리적인 문제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장님은 그냥 본인 생각대로 들이밀어 가지고 내가 뭘 잘못된 게 있냐 하는 식으로 하시면……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위원장 맹성규** 그렇게 받아들이게…… 그렇게 받아들였다니까요, 지금.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5% 내다가 17% 내게 됐으니 한 번에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 맞습니다. 그 부담 큰 점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조건 봐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코레일도 가지고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큰 쟁점이 뭐냐 하면 지금 문제는 대체할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대체할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대전 지역에서는 명소 아닙니까. 그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명소니까 이것 무형의 브랜드 가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말씀대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가 쟁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코레일 사장님, 유통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통하고 코레일하고 국토부, 국토부도 업무 관리감독 기관으로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 가장 중요한 대전시 그렇게 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게 지금 전 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대전시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말씀하신 것도 듣고 있고요. 그것 다 포함해서 지금 해결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많은 국민들은, 성심당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설득해 갈 수 있는 논리와 설득력을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30초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정리하세요.

○전용기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성심당은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매출액 대비해서 17% 이상 받는 매장은 없습니까?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많이 있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역에 들어가 있는 업체는 매출액에 비해서 30% 50%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는 왜 안 깎아 줘니까? 형평성에 맞추려면 다 17%로 맞춰야지요. 성심당은 돈 많이 번다고 밀치고 다른 데는 안 깎아 주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기본적으로 매장 운영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이제 충분히 문제를 전달했구요.

김 대표님도 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지금 우려를 전달한 거고. 우리 코레일 대표님도 그렇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어떤 기준이 나오든지 간에 합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다 좋은 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코레일유통(주)대표이사 김영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 사장님?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은 결단을 내야 될 순간

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방안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들어가세요.

다음에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 이한준 사장님, 2023년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직접 LH 잘못과 관련해 가지고 사과문 발송하신 적 있으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 위원 국토부로부터 LH 징계받은 것 있었습니까, 이 건 관련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징계라기보다는 이 건을 계기로 해서 LH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잠깐만.

GS건설 시공사로서 영업정지 있었고 2022년도에 화정동 아이파크 사건 관련해 가지고 현산 8개월 영업정지 받고 했는데 LH는 사과문도 발송하고 잘못하고 했는데 왜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규정상 시행사에 대한 제재 조치는 별도로 규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말씀해 보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인 책임은 GS한테 전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거기에 의해서 GS가 손실보상부터 모든 것은 다 보상을 했고요. 그 계약 방식이 CMR 방식이라고 그래서 설계부터 준공 감리까지 모든 것을 시공사가 책임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S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지난해 국감에서도 그게 지적이 돼 가지고 모든 부실의 원인은 GS에 있었기 때문에 GS가 모든 것을 손실 부담 이런 것을 했고 저희 LH는 대신에……

○정준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 또 한번 여쭙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실장님 들어가시고.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 콘크리트 양생과 관련해 가지고 모니터링 기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예.

○정준호 위원 LH 현장에도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까?

○국토안전관리원장 김일환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돼서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사고가 있으면서 그런 것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일부 적용해서……

○정준호 위원 이한준 사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콘크리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의 강도, 콘크리트 강도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 기계는 왜 따로 운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 기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질문 마치셨습니까?

○**정준호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경기도 성남 분당을의 김은혜 위원입니다.

김규철 실장님, 오전 질의 당시에 서울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이 금년에 3만 8000호, 그러니까 장기 평균 대비해서 충분한 물량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은혜 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중에 대량 공급하는 물건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입니다. 이게 2006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과거 평균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2014년 이전에는 착공됐어야 하는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14년이 지난 2020년에야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실 도심지 내 주택공급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과거에는 사실 규제 중심의 재건축 정책이었다면 지원 형태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실제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건축 관련 된 3대 규제 사항도 정비를 했고요. 분상제라든가 재건축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의 주공아파트들을 조사해 보면 정비사업을 하려고 해도 구축아파트 1개 동은 남겨 뒀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 추진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유예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매제한 완화,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래서 내년에 준공될 둔촌주공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말로 준공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 수치로 이전 정부의 인허가 성과로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일찍 건설되었어야 할 주택들이 과도한 규제로 늦게 공급이 된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보세요. 즉 전 정부 인허가 물량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훨씬 전에 인허가가 났어도 규제로 정비사업을 틀어막고 속도를 나지 않게 하니까 이것을 이제 사업성과 속도를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로 내주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실장님 오늘 오전 내내 답변하신 것을 봤는데요. 이 같은 팩트를 설명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국토부가 알려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제 재건축 관련해서는 규제 완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물량, 지난 정부에 연평균 몇만 호입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2만 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2만 8000 정도……

○김은혜 위원 2만 8000호 정도 되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이번 정부는 한 해만 예를 들면 23년도라고 하면 몇만 호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지난해가 6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240% 정도 늘어난 건데요. 이런 인허가가 공사비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줄어든다 하더라도 저는 민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동의하고 규제 완화 관점에서 저희들이 재건축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윤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균 위원 국토부 이우제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도로국장입니다.

○윤종균 위원 지난 회의 때 안성 38국도 3.7km 확장공사가 최초 3년 내 완공 목표였으나 지금 8년째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토부장관님으로부터 연말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윤종균 위원 이 문제는 단지 안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도 공사에서도 지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립니다.

먼저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특별히 우리 맹성규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써 주신 덕분에 원래는 한두 달 걸리는 일인데 이번 주 안에 발주 권고를 위한 사전 실무작업을 빠르게 완료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말씀 드리고요.

국도 공사 지연의 주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업체가 타절,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성만 하더라도 세 번에 걸쳐서 공사업체가 타절되어서 늦어진 것이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영세한 업체가 수익이 나는 공사를 먼저 하고 망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고 겨울이 오면 또 공사 중지되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업체가 타절됐을 때 빠른 입찰 절차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제가 참고할 만한 프랑스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발주 요청, 보완 요청, 기술 검토, 계약 종결까지 대략 6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가 공사하다가 타절되면 이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서 또 똑같이 6개월이 걸리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기술 검토까지 다 끝난 공사인데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절차를 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른 나라도 그런가 좀 찾아봤습니다.

PPT를 좀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도서관의 법률정보 회답을 통해서 알아본 건데요. 프랑스에는 공공조달법전에 있어서 강제적 긴급성 즉 발주청이 자초한 것이 아니라 발주청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 긴급성이 인정될 때는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절차를 단순화해서 공개경쟁입찰은 기존의 35일에서 15일로, 제한경쟁입찰은 30일에서 10일로, 협상을 통한 절차는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찰 기간을 무려 60%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습니까?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 아닙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저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균 위원 국장님, 제가 회의 끝나고 관련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서 이를 반영한 법 개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국토위 전체회의 때 박상우 장관님께서 연말까지 차량 소통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셔서 안성시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도로국장 이우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간사님.

○권영진 위원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입니까?

대구공항하고 무안공항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문 닫으실 생각이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현재까지 대구공항과 무안공항은 항공기의 기재 감소나 또는 여러 가지 항공기 수익이 높은 인천공항 중심으로 항공사가 움직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지금 수익이 많이 떨어지고 국제선이 특히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진 위원 지금 대구공항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작년에 약 1억 상당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흑자예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권영진 위원 다른 공항들은 코로나 대비해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항 편수로 보면 231%, 여객으로는 257%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구공항은 코로나 대비 2019년 대비 41% 47% 무안공항은 43% 53%,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그래서 나름대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항공기의 기체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권영진 위원 아니, 공항이라는 건요 공항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2014년도 대구시장 처음 될 때 대구공항 이용객이 103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코로나 직전에 487만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공항정책을……

그때 이미애 지점장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지금 현재……

○권영진 위원 그분과 대구시가 손을 잡고 대구공항을 어떻든지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5년 만에 근 5배를, 그래서 만년 적자공항을 흑자공항으로 해서 한국공항공사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볼 때는 대구하고 무안공항은 다 이전작업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공항공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해서……

○권영진 위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도 그렇잖아요. 업무보고에 김포공항은 완전히 별도의 꼭지로 해서 ‘한중일 노선 강화로 김포공항 동북아 초연결성 확보’ ‘김포공항의 비즈포트 역할 재정립’ ‘김포공항 마스터플랜 추진’ 이렇게 하고, 지방공항들은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통쳐서 한 꼭지로 ‘지방공항 활성화’ 이렇게 접근하면 지방공항들 살리는 정책이 없는 거지요, 이게.

이게 하나하나 공항마다 특색이 있고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세워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가면 언제 활성화되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업무보고 다시 해서 지방공항마다 어떻게 특색있게 살려 나갈 건지 계획 세워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간사님.

○문진석 위원 김규철 주택토지실장님, HUG에서 악성 임대인 127명을 발표했잖아요. 신상 공개까지 했는데 그중의 67명이 임대사업자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국토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국토부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한 건 없습니다.

○문진석 위원 국토부가 너무 손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왜 이런 임대사업자들이

말소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소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문진석 위원** 그러니까 말소 요건을 시행령으로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 규정을 보면 이것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놔어요, 말소 요건. 그러니까 지방단체장이 취소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시행령 당장 고쳐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제 말소 요건에 따라서 말소가 되게 되면, 결국 피해가 발생해야 말소를 할 수 있는데 중국적으로 말소가……

○**문진석 위원** 67명은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이렇게 규정까지 했잖아요,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소……

○**문진석 위원** 그런데 이런 악덕 임대업자들이 여전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제가 위원님께……

○**문진석 위원** 국토부 입장에서든 뭔가 조치를 빨리 신속하게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실제 말소……

○**문진석 위원** 좋습니다. 어떤 조치할 것인지 보고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문진석 위원** LH 사장님,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탕정2지구 택지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민간이 이미 택지개발사업하면서 보상이 완료됐잖아요. 작년에 보상이 완료됐는데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거기의 보상 가격과 지금 LH에서 탕정2지구 보상이 감정한 것하고는 거의 더블 차이가 난다는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바로 인접해 있고 여건도 별로 좋지 않아,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택지지구가 훨씬 더 여건이 좋아요.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데 보상이 끝난 보상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감정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기 때문에……

○**문진석 위원** 사장님이 토지 지주라 그러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양해가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아니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피보상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진석 위원 아니, 그것 알아요. 저도 그것 아는데 그런 뻔한 얘기하지 마시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진석 위원 아니, 상식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श्य, 사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상식적으로 제가 판단해서……

○문진석 위원 제가 LH가 사업하는 데 방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땅값이 옆의 보상 가격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인데 지금 여기 새로 보상하려고 하는, 작년보다 금년에 토지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토지주들한테는 보상 가격을 50%로 한다고 하면 사장님 같으면 인정하겠느냐고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데 유감스럽게, 송구스럽습시다마는 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LH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피보상자가 감정평가사 정하고 또 저희도 하나 정하고……

○문진석 위원 그것 누가 믿습니까, 그것을. 일반 시민들이, 토지주들이 거기에 동의해요? 억울함이 없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감정가격……

○문진석 위원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토지주라 그러면 그게 양해가 되겠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LH 사장으로서 감정가격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 맹성규 사장님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하여튼 억울함 없게 해 주세요. 납득이 돼야지.

○위원장 맹성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유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 들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섯 분이요, 다섯 분.

그러면 처음 질의 순서대로, 질의한 대로 하겠습니다.

맨 처음 윤종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도로공사 사장님, 아까 파기환송된 내용 제가 좀 파악을 해 봤더니만 업체에서 받았던 임금하고 또 외주업체에서 받았던 임금하고 산정 방식 차이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외주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법 등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끝까지 대법까지 가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만 정리를 하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글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윤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산정 방식의 문제 때문에 있었던 거라 그러면 그 부분이 일단은, 다시 그 부분 열어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그러면 대법 판결이 지급하라고 한 것 같으면 정리하자고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최종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종오 위원 그게 확정되면 정리하는 게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표 받던 분들 수납원들 지금 전부 다 고속도로 쉼터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몇 군데 맡아서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쉼 곳도 한 군데 없더라고요. 중간 정도에 쉼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 예.

○윤종오 위원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LH 사장님, 최근 부산의 경우에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가 문제되고 있는데 구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LH에 매입을 신청해도 매입 가능 여부 판단, 우선매수권 양도 절차 등 이런 것들의 이유로 몇 개월씩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경매가 또 진행돼서 계속 유찰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낮아져서 피해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하겠고요. 우선 그러기 전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없도록, 부산이라 그러셨으니까 부산지역본부에 지시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대출금 20년 무이자 분할상환하는 특례제도 있지요? 이 부분도 공동담보 피해자들에게 실효성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도 완전 결론이 다 내려면 경우에 따라서 몇 년 걸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를 딱 끊어서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랬는데요.

김규철 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 때문에 안 하려 그랬는데 이 국토부 보도자료의 24년 준공 물량, 이게 지금 이 정부의 규제 완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잘해야 된다고요. 사업 승인 착공 준공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준공 물량하고 규제 완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규제 완화를 해서 사업 승인이 잘되고 착공이 잘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하실 때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괜한 정쟁이 돼요. 이것 정쟁거리도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택정책 성공하기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고.

둔촌주공아파트 준공하고 규제 완화하고 뭘 상관있어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 맞아요.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했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도 더 잘되고 착공도 다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어떤 규제 때문인가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설경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형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 준공을 하려 그러면 착공을 하고 나서도 최소한 거의 40개월 3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여기는 지금 늦어진 게 자기들끼리 분쟁 때문에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조합아파트의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요. 괜한 분쟁이 생긴다고요, 이런 것은.

제가 뭐 틀린 얘기했나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 서울시의 3만 8000호 입주 예정 물량 중에 둔촌주공이 1만 2000호가 포함돼 있습니다. 둔촌주공 1만 2000호가 실체는 14년도에 착공이 돼서 굴러가야 될 부분이 그동안에 좀 지연되면서 20년도에 착공이 됐습니다. 20년도 착공 이후에 22년도에도 사실은……

○안태준 위원 6개월 정지됐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분쟁이 생기고 해서 잘 안 굴러간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그게 굴러갈 수 있도록 6개월 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재건축 부담금 완화라든가……

○안태준 위원 그 조치가 지금 정부에 된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거주 의무 유예라든가 아니면……

○안태준 위원 지금 정부에 된 거냐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지금 정부에서 됐고요.

○안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것하고 관계가 있느냐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3대 규제사항이 분상제하고 재건축 부담금하고 안전진단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됐고 그런 규제 완화 조치들이 지금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빨리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영향은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실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맞는 말씀인데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제대로 말씀을 해 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서범수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사장님, 하나만 먼저 확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답변에 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에 사설 경비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 그러셨습니다. 실제 몰랐습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고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은……

○서범수 위원 아, 그거야 그렇지요. 경찰에서 협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경찰에서 공항공사 쪽으로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표현이 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통보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알고 계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을 알고 계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미리미리 하고 계셔야 되지 ‘우리는 몰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모니터링 다 하실 것 아닙니까, 상황실 같은 데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도 왜 몰랐다 그러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 기회가 없어 갖고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에요. 저도 시간이 없어서요.

일단 알고 계셨지요?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그러면 질의 끝나신 다음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답변을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LH 사장님, LH에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다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공사비 내역을 검증해서 매입 가격을 산정하고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다, 그렇게 하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서범수 위원 잠시만요, 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그와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1차에 평가를 한 것 이것은 사업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할 거고 2차에 매입 가격을 결정할 때 했는데 LH에서 의뢰한 평가 범위는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21년에서 24년인데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양적 완화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로 인해서 자재비도

올라갔고 했는데 이게 1.5% 떨어졌어요. 좋다. 이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평가한 B의 경우에는 2.67%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B와 A의 차이는 얼마나 나느냐 하면 8.64% 차이 납니다. 이게 산술평균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법 누가 합니까, 국토부 감정평가법?

두 감정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날 때는 재조사를 하고 통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먹이지요? 그런 규정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서범수 위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양쪽의 두 회사가 독립적으로 평가를 해야 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담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너희 얼마 할래?’ ‘너희는 이만큼 하지’, 10% 안에 들어가야 되니 자기네들이 알아서 서로 담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0% 이상 차이가 나면 재조사를 하고 그걸 통보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징계를 먹인다는 말이지요, 현실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규정을 계속 지금 살리고 있는 거지요, 살리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양쪽은 서로서로 의논을 해서 10% 안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넣으려고 노력을 하겠지요. 그러면 A하고 B, 그러니까 LH에서 의뢰한 감정평가하고 사업자 측이 의뢰한 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됴에도 불구하고 담합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규정도 좀 바꿔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L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LH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아까 사장님께서 ‘저희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LH가 그레이트 갑인데요. 눈만 깜짝하면 알아서 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B 사업자 측에서는 10%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 담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 사례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그런 개연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서범수 위원 그렇게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님.

실장님, 지난 7월 5일 물류기업·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했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 자리에 쿠팡CLS도 참석했나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로켓배송 야간배송 같은 것이, 쿠팡CLS의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망 사건이라는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토부장관님께서도 답변 중에 ‘일상생활이 특정 계층의 희생을 강요해서 그 토대 위에 성립돼서는 안 된다. 택배시스템 전환이 우리 사회에서 급하게 이루어져서 관련 인프라가 미비한 게 틀림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공감을 하셨어요. 맞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쿠팡이 택배회사 등록을 받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와 다른 택배회사의 등록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아직 제가 못 받았어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그것 별도로 위원님께 가서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실제로 야간배송 로켓배송 같은 새로운 택배 형태가 나타나면서 과로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허가받을 때는 표준계약서 의무 조항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쿠팡CLS는 클렌징 조항이라는 걸 넣어서 택배노동자의 구역 이런 것을 명확히 하지는 않으면서 또 이후에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는 게 필요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저희가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클렌징 제도가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를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우선 쿠팡CLS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엄정희**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주택토지실장님, 오늘 저하고 몇 가지 관점에서 계속 맴돌이를 하고 있어서, 아까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10년간 거주를 하면서 상당한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는, 다른 사례 하나를 얘기할게요.

대전 발생 사례로 아이 둘을 가진 4인 가구 엄마 이야기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

정됐지만 경매 유예가 인정되지 않아서 경매가 진행됐고 낙찰이 돼 버렸고 결국 나가게 됐어요. 그사이 공공임대를 신청했지만 4인 주택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제공을 못 받았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제공 실적이 262건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인천이라든지 대구 부산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부 발표안에 경매차익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수의 경우가 시뮬레이션 결과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임대주택 10년간 살게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최소 보장액을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하는데 계속 맴돌이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일단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경매차익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 지원금이 모자라면 재정을 투입해서……

○염태영 위원 주거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현재 있다는 걸 그걸 전제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면……

○염태영 위원 같이 시뮬레이션, 그런 결과가 나오면 바꾸시겠어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소위 논의 과정에서 계속 같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 그렇게 대책이 전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책을 같이 세우셔야 된다는 약속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HUG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HUG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HUG가 예전부터 전화 연결 잘 안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잘 아시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이소영 위원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 제작년 기사인데 ‘80번 전화해도 안 받는다’ ‘120통 걸어도 안 받는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지적되는 문제거든요.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올해 들어서 콜센터 상담 인원을 하반기에 20명 더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한 상담 인원도 2명에서 7월 초에 5명으로

증원을 해서 조금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현재까지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재작년에 콜센터 상담 인력을 많이 늘려서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담 전화도 꾸준히 증가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콜센터 상담원 한 분당 하루에 상담하는 건수가 60건, 하루에 60통이면 전화 한 통당 10분씩만 계산을 해도 10시간이지요. 그러면 전화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해야 될지 전화 연결 얼마나 잘 안 될지 짐작할 만한 겁니다. 이건 전체 콜센터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 전용 콜센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달 초까지 상담사가 2년 동안 딱 두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상담원한테 연간 2만 3000통의 전화가 걸려 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80통을 걸어도 연결이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이번 달 7월 4일에서야 세 분을 더 추가 채용해서 다섯 분이 됐는데 조치가 늦어도 한 참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추정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만 수만 명인데 2년 동안이나 두 분으로 응대하겠다는 거 하는 게 좀 너무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객 수요 감당 못 하는 것은 현장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하는 보증이행상담센터 담당센터 이것도 보니까 경기센터 보증이행 처리율은 36%, 인천센터는 51% 정도고요. 이것은 접수 조치가 된 것 기준이고 접수조차 되지 않고 기다리는 신청 건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처리율은 아주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지각 변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반환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을 동동 구르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 현장이든 콜센터든 인력 확충 등등 이런 조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올해 1월 초에 인천관리센터하고 경기도 수원에 경기 관리센터를 신설해서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여의도에서 처리 하던 물량들을 많이 넘겼습니다, 많이 넘겼고.

그다음에 이행 관련해서 전담으로 하는 상담사들이 있는데 상담사가 20명인데 지금 40명을 충원해서, 5월 달에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사가 60명으로 늘어 가지고 여기도 국민들이 이용하시기에 조금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민원인들이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아까 성심당, 정리만 하고 가면요.

철도공사 사장님께서 규정을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받았던 내용들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형평성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 아닙니까? 사실 성심당 매출이

높기 때문에 5%에서 17%로 올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상식적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사실 형평성을 계속 얘기할 거면 다른 역사의 매출 대비 30% 50% 이상씩 임대료를 내는 그런 업체는, 계속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할 거면 그 사람들도 17%로 내려 줘야 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만을 이야기하면서 성심당은 4억 이상 4배 이상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엔 불과하다. 그래서 그 내용만으로 얘기하기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결국에는 지역과 상생을 하려면 이렇게 너무 매몰되지 않고 지역의 요건들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철도국장님도 좀 봐 주시고 사장님께서도 챙겨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답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 기본적으로 17%는 최저로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 30% 40%까지 쓰고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서 30% 40% 받는 업체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하게 되면 누구는 30%를 써도 성심당만큼 저희한테 납부를 못 하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도 이게 사실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이게 이슈되니까 제도 개선하기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7%도 좀 낮춰 가고 나름대로는 공공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잘했다라는 어떤 시간을 가져가는 와중에 지금 시끄러워진 건데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만 얘기해 가지고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LH 사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거든요, 사전청약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 정책에 따라서 LH는 매각한 택지의 경우에도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민간 사전청약을 확대했지 않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전용기 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전청약 취소되면 피해자는 시간 날리고, 돈은 크게 날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시간 날리고 기회 날리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데 LH는 계약금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고, LH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꿈꿔 왔던 피해자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토부와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서면질의로 넣을 건데, 엘리베이터

전기 재활용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이제는 사실 우리가 EGS 경영이라고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기 아끼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H가 이런 재사용에너지를 쓰는 데가 한 20%밖에 안 된다고, 21%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LH에서 좀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15년 12월 이후 신규 임대주택과 16년 이후 승강기 교체 대상 주택에는 전면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적용되고 있는 임대아파트 추가 설치를 위한 시범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간사님.

○**권영진 위원** 간사는 질문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제가 HUG의 재정건전성하고 든든전세사업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 예,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국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보고하면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관심 영역 밖의 문제도 있어서 각 기관별로, 지금 각 공공기관은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저희 방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각 기관별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어떤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각 기관별로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ESG 경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만 각 기관별로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질문시간은 2분을 짧게 해 주셨는데 숙제는 제일 많이 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28개 산하기관을 상대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LH의 경우는 순살 아파트나 부실 시공에 관한 안전 관련 보고가 없었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 보고 내용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에는 전세보증 악용 방지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로 전세보증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확신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요금 부과 문제 그리고 기존 건설된 고속도로의

하부구조 개선 문제, 코레일의 경우에는 열차 편성의 증차 문제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는 민간 경호인의 과잉 행위 규제 문제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지하화를 구체화하는 문제 등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회의 때까지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잠깐만, 수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속기록 수정인데요, 10초만.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전용기 위원 제가 대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세상 처음 들어 본 EGS 경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오타가 나 있어서 그렇게 읽었거든요. ESG 경영으로 수정해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알아서 고쳤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각 기관장님들과 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국토법안심사(13인)	김기표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7)
	◎권영진 김은혜 김정재 서범수 윤영석	국민의힘(5)
	황운하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교통법안심사(13인)	◎문진석 손명수 송기현 윤종균 이연희 이춘석 정준호	더불어민주당(7)
	김도읍 김희정 엄태영 윤재옥 정점식	국민의힘(5)
	윤종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기금심사(13인)	◎한준호 손명수 안태준 염태영 이연희 전용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7)
	권영세 김도읍 김희정 서범수 정점식	국민의힘(5)
	윤종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10인)	김기표 북기왕 송기현 윤종균 이춘석 전용기	더불어민주당(6)
	◎엄태영 김은혜 김정재 윤영석	국민의힘(4)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30인)

권영세 권영진 김기표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복기왕 서범수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엄태영 엄태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소영 이연희 이춘석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한준호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입법심의관 문성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진현환
 제2차관 백원국
 기획조정실장 문성요
 국토도시실장 이상주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교통물류실장 엄정희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도로국장 이우제
 기술안전정책관 김태병
 철도안전정책관 정의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희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기획조정실장 송영환
 한국도로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문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정기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유병태

기획조정실장 허중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용복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이성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양영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박승기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김일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 이종국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원장직무대행 백성기
주택관리공단(주)
대표이사직무대행 허종길
코레일관광개발(주)
대표이사직무대행 김시섭
코레일로지스(주)
사장직무대행 이준우
코레일네트웍스(주)
대표이사 전찬호
코레일유통(주)
대표이사 김영태
코레일테크(주)
대표이사 조대식
항공안전기술원
원장 이대성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나경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강훈
건설기술교육원
원장 권대철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 남일석

국립항공박물관

관장 안태현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 오병삼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02)

이상 4건 7월 9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6)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9)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4)

이상 4건 7월 10일 회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5)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024. 7. 1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0.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7)

이상 6건 7월 11일 회부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2)

이상 3건 7월 12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75)

교통정책기본법안

(2024. 7. 1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2.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12.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6)

이상 5건 7월 15일 회부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5)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5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5.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4)

이상 8건 7월 16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2024. 7. 1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1)

7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7. 11.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1.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0)

사회적경제기본법안

(2024. 7. 1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3)

이상 3건 7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024. 7. 1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3)

7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47호	2024. 6. 25.	부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348호	2024. 6. 27.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27호	2024. 6. 25.	입법예고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37호	2024. 6. 26.	입법예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952호	2024. 6. 27.	입법예고